

연구총서 99-23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최 수 영
박 영 호
흥 관 희
허 문 영

통 일 연 구 원

발 간 사

1999년은 남북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온 한 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에 지속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경제회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북한 스스로도 경제회생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대내적으로 체제안정이 공고화되고,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의 변화와 함께 우리도 1999년에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1999년에도 남북한 당사자관계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통미봉남 전략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런 상황하에서 서해교전이 일어났으며 금강산 관광객이 억류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금강산관광사업의 확대, 남북한간 농구경기 교환, 대중문화예술인의 방북 등을 통해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북한관련 인식,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북한정세, 통일관련 주변환경 및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는 1992년이래 통일연구원의 계속사업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여론조사로서 그 동안 북한·통일관련 국민의식 변화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파악·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서 얻은 주요한 발견점은 정부의 대북정책 개발과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는 설문지 작성에서부터 최종 결과분석에 이르기까지 본 연구원의 다수의 연구진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책임자인 최수영 박사(연구위원)와 공동연구자인 박영호 박사(선임연구위원), 홍관희 박사(연구위원), 허문영 박사(통일정책실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토론을 해주신 연구원 연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1999년 12월
통일연구원 원장
곽 태 환

- 목 차 -

I. 서론	1
1. 조사목적	1
2. 조사내용	2
3. 조사방법	3
4. 표본의 특성	5
II. 북한관련 인식	7
1. 북한에 대한 관심	7
2. 북한에 대한 인식	9
3. 북한의 변화 정도	11
4.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	12
5.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14
6. 북한 경제난의 원인	15
7. 북한의 식량사정	17
8. 북한의 장래	18
9. 남북한 관계 전망	20
10.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21
11.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23
12. 북한관련 보도내용	24
13. 북한관련 정보의 양	26
14. 남북한 분단 실체	27

III. 통일관련 주변 환경 인식	43
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43
2. 통일기반 조성과정	44
3. 통일 예상시기	46
4.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	47
5.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50
6.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51
IV. 대북정책관련 인식	60
1.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60
2. 통일에 대한 견해	61
3. 한·미·일 공조체제와 남북관계	63
4.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64
5. 남북관계 개선 우선분야	65
6. 인적교류 추진방안	67
7. 남북정상회담 개최	68
8.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	69
9. 남북한의 준비감축	71
10. 북한 정보 및 방송 개방	72
11. 탈북주민의 정착문제	74
12. 통일교육의 방법	75
V.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89
1. 북한경제의 바닥 탈출	89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90
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과 추진속도	92

4.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	94
5. 금강산관광의 통일에 대한 영향	96
6. 중국내 탈북자 문제	98
VI. 요약 및 결론	107
1. 북한관련 인식	107
2. 통일관련 주변 환경 인식	109
3. 대북정책관련 인식	111
4.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113
5. 종합 결론	114

- 그림 목 차 -

<그림 2-1>	북한에 대한 관심	8
<그림 2-2>	북한에 대한 인식	10
<그림 2-3>	북한의 변화 정도	12
<그림 2-4>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	13
<그림 2-5>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15
<그림 2-6>	북한 경제난의 원인	16
<그림 2-7>	북한의 식량 사정	18
<그림 2-8>	북한의 장래	19
<그림 2-9>	남북한 관계 전망	21
<그림 2-10>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22
<그림 2-11>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24
<그림 2-12>	북한관련 보도내용	26
<그림 2-13>	북한관련 정보의 양	27
<그림 2-14>	남북한 분단 실체	28
<그림 3-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44
<그림 3-2>	통일기반 조성 과제	45
<그림 3-3>	통일 예상시기	47
<그림 3-4-1>	북·미수교	48
<그림 3-4-2>	북·일수교	49
<그림 3-5>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51
<그림 3-6>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52
<그림 4-1>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61
<그림 4-2>	통일에 대한 견해	62
<그림 4-3>	한·미·일 공조체제와 남북관계	64

<그림 4-4>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65
<그림 4-5>	남북관계 개선 우선분야	66
<그림 4-6>	인적교류 추진방안	68
<그림 4-7>	남북정상회담 개최	69
<그림 4-8>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	71
<그림 4-9>	남북한의 군비감축	72
<그림 4-10>	북한 정보 및 방송 개방	73
<그림 4-11>	탈북주민 정착 문제	75
<그림 4-12>	탈북주민 정착 문제	76
<그림 5-1>	북한 경제의 바닥 탈출	90
<그림 5-2>	북한의 미사일 개발	92
<그림 5-3-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93
<그림 5-3-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의 추진속도	94
<그림 5-4>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	96
<그림 5-5>	금강산관광의 통일에 대한 영향	97
<그림 5-6>	중국내 탈북자 문제	99

- 표 목 차 -

<표 1>	응답자 분포	6
<표 2-1>	북한에 대한 관심	29
<표 2-2>	북한에 대한 인식	30
<표 2-3>	북한의 변화 정도	31
<표 2-4>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	32
<표 2-5>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33
<표 2-6>	북한 경제난의 원인	34
<표 2-7>	북한의 식량 사정	35
<표 2-8>	북한의 장래	36
<표 2-9>	남북한 관계 전망	37
<표 2-10>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38
<표 2-11>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39
<표 2-12>	북한관련 보도내용	40
<표 2-13>	북한관련 정보의 양	41
<표 2-14>	남북한 분단 실체	42
<표 3-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53
<표 3-2>	통일기반 조성 과제	54
<표 3-3>	통일 예상시기	55
<표 3-4-1>	북·미수교	56
<표 3-4-2>	북·일수교	57
<표 3-5>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58
<표 3-6>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59
<표 4-1>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77
<표 4-2>	통일에 대한 견해	78

<표 4-3>	한·미·일 공조체제와 남북관계	79
<표 4-4>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80
<표 4-5>	남북관계 개선 우선분야	81
<표 4-6>	인적교류 추진방안	82
<표 4-7>	남북정상회담 개최	83
<표 4-8>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	84
<표 4-9>	남북한의 군비감축	85
<표 4-10>	북한 정보 및 방송 개방	86
<표 4-11>	탈북주민 정착 문제	87
<표 4-12>	탈북주민 정착 문제	88
<표 5-1>	북한 경제의 바다 탈출	100
<표 5-2>	북한의 미사일 개발	101
<표 5-3-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102
<표 5-3-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의 추진속도	103
<표 5-4>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	104
<표 5-5>	금강산관광의 통일에 대한 영향	105
<표 5-6>	중국내 탈북자 문제	106

I. 서론

1. 조사목적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1999년에도 남북관계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일본과의 수교협상 재개에 비중을 두는 대외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교전이 일어났으며 금강산 관광객이 억류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금강산관광사업의 확대, 남북한간 농구경기 교환, 대중문화예술인의 방북 등을 통해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증대되었다.

1999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1990년대에 지속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경제회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대내적으로 체제안정이 공고화되고,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북한관련 인식,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 국민들이 북한정세, 통일관련 주변환경 및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는 1992년이래 통일연구원의 계속사업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따라서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는 국민의 정부

2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출범 이후 두 번째 여론조사로서 그 동안 국민의식 변화를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파악·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내용

1999년도 국민여론조사에서는 통일문제 관련사항을 북한관련 인식, 통일관련 주변 환경 인식, 대북정책관련 인식,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제2장의 북한관련 인식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설문지 문1), 북한에 대한 인식(문2), 북한의 변화 정도(문3),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문4),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문5), 북한 경제난의 원인(문6), 북한의 식량사정(문7), 북한의 장래(문9), 남북한 관계 전망(문10), 북한의 적화통일정책(문11),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문13), 북한관련 보도내용(문14), 북한관련 정보의 양(문15), 남북한 분단 실제(문16)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3장의 통일관련 주변 환경 인식은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문17), 통일기반 조성 과제(문18), 통일 예상시기(문19),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문20), 경제회복과 남북관계(문21),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문22)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4장의 대북정책관련 인식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정책(문23), 통일에 대한 견해(문24), 한·미·일 공조체제와 남북관계(문27),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문28), 남북관계 개선 우선분야(문29), 인적교류 추진

방안(문30), 남북정상회담 개최(문31),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문32), 남북한 군비감축(문33), 북한 정보 및 방송 개방(문35), 탈북주민 정착 문제(문36), 통일교육의 방법(문38) 등이 조사되고 있다.

제5장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으로 북한경제의 바다 탈출(문8),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1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과 추진속도(문25, 문25-1),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문26), 금강산관광의 통일에 대한 영향(문34), 중국내 탈북자 문제(문37)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사방법

가. 표본추출

이 여론조사는 1999년 12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및 8개도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고 그 중에서 1,200명을 조사대상자로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 다단계 지역 무작위 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실제의 표집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와 8개도에서 20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배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시지역에서는 동을, 그리고 군지역에서는 읍·면을 선정하고, 3단계에서는 동에서는 통반을, 읍·면에서는 리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전국에서 99개의 최종표집단위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표집단위인 반과 리에서 성별 및 연령에

4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근거하여 할당량을 부여하는 할당표집방법을 택하여 각 표집단위별로 12명 내외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부재시 또는 응답을 거절할 경우 동일지역 내에서 성별, 연령 등이 같은 다른 응답자로 대체하였다.

나. 설문 및 면접방법

먼저 조사에 앞서 분야별로 조사항목을 정한 다음 분야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사회조사 연구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고 1999년 11월초 연구원 내에서 자체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을 더욱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주)현대리서치연구소의 주관 아래 현지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으로는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면접조사가 사용되었다.

다.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응답내용의 논리성 및 범위 검토를 거친 후 코딩하여 통계프로그램(SPSS ver 7.5 for Windows)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항목별로 기본빈도(frequency)를 구하고, 성별, 연령, 세대,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 등 배경변수와 교차분석(cross-tabulation)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교차분석은 $P < 0.05$ 의 유의도가 있는 것

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결과의 오차는 95%의 신뢰구간에서 표본수 1,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 2.83 을 넘지 않는다.

4. 표본의 특성

본 여론조사는 20세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집된 1,200명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대표한다. 현지조사 결과 총 1,200개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모집단의 특성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1995년 현재의 모집단인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남녀 성비는 20세 이상인 모집단의 성비(남자 50.2%, 여자 49.8%)와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 학력 등에서도 약간의 편차가 있었으나 모집단과 여론조사의 시차에 따른 변화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본추출단계에서 계획대로 표집되었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	응답자 비율(%)
전 체		1200	100.0
성 별	남 자	590	49.2
	여 자	610	50.8
연 령	20대	331	27.6
	30대	330	27.5
	40대	222	18.5
	50대	237	19.8
	60세 이상	80	6.7
세 대	30세 이하	373	31.1
	30세 이상	827	68.9
학 력	중졸이하	210	17.5
	고 졸	604	50.3
	대재이상	386	32.2
가구소득	120만원 미만	237	19.8
	120~199만원	452	37.7
	200~299만원	334	27.8
	300만원 이상	177	14.8
거주지	서울/경기	549	45.8
	경 상	347	28.9
	전 라	142	11.8
	충 청	122	10.2
	강 원	40	3.3

II. 북한관련 인식

1. 북한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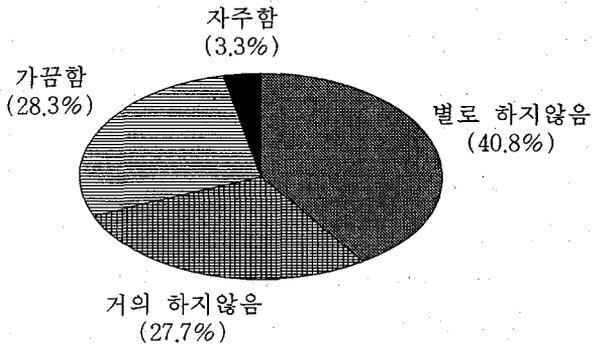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주위 사람들과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27.7%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낮거나 무관심하다는 응답률이 68.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주 한다」와 「가끔 한다」는 각각 3.3%, 28.3%로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응답은 3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높은 국민들보다 관심이 낮은 국민들이 월등히 많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2/3 이상은 평소 북한 문제를 대화주제로 삼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관심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기보다는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풀이된다. 1995년과 1998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수중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36.4%가 북한 관련 대화를 자주 혹은 가끔 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26.9%에 불과하여 여자보다는 남자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학력별로는 대제 이상의 고학력자, 소득별로는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관심을 가진 반면 강원도의 경우 20.0%만이 북한에 대해 자주 혹은 가끔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북한에 대한 관심



2.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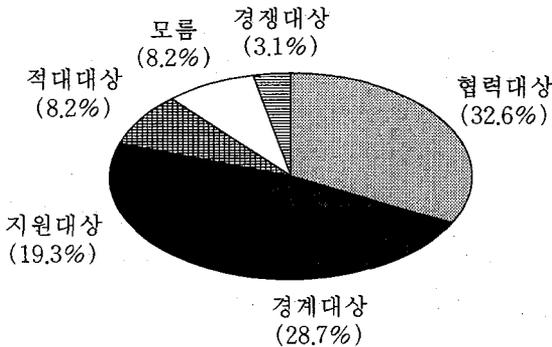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남북관계 및 조사시점 등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중 「협력대상」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대상」(28.7%), 「지원대상」(19.3%), 「적대대상」(8.2%), 「경쟁대상」(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협력대상」과 「지원대상」)과 부정적 인식(「경제대상」과 「적대대상」)으로 대별해 보면 긍정적 인식이 48.0%로 부정적인 인식 36.9%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경쟁대상」이라고 응답한 자는 매우 적었다.

1999년도 조사결과는 1995년과 1998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95년과 1998년에 각각 59.6%, 54.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6.9%로 대폭 낮아졌다. 이것은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 금강산관광사업의 확대, 서해교전시 보여준 국민들의 여유 있는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연령, 세대,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 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연령이나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북한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29.3%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50대는 49.0%, 60세 이상은 43.8%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30세 이

하는 28.2%, 30세 이상은 40.7%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응답자의 38.1%, 고졸은 50.0%, 대재 이상은 62.4%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을 더욱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120만원 미만은 48.1%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300만원 이상은 58.7%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거주지에 따른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라도(58.5%), 경상도(53.9%), 서울/경기지역(52.3%)이 높게 나타난 반면 충청도(41.0%), 강원도(40.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2-2> 북한에 대한 인식



3. 북한의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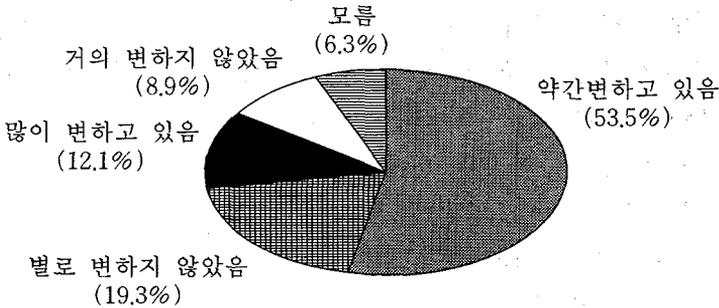
어느 사회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회는 없을 것이지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북한의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북한의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많이 변하고 있다」와 「약간 변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12.1%, 53.5%인데 반해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9.3%, 8.9%였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65.6%)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28.2%)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5년도와 1998년도 조사결과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48.2%, 50.2%였다. 이번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변화 정도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나 민간차원에서의 경험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북한의 변화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자(69.3%)가 여자(62.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북한의 변화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세대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65.7%, 고졸 62.3%, 대재 이상 70.8%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학력에서 북한의 변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거주지별로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라도(74.6%)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55.0%)가 가장 낮았다.

<그림 2-3> 북한의 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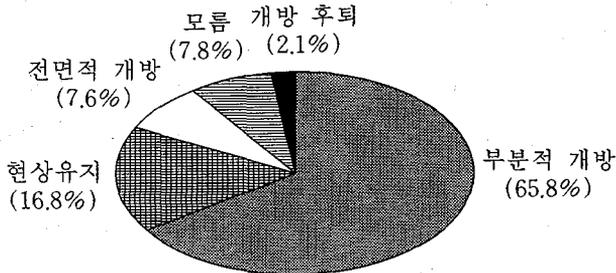
4.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

21세기 김정일 정권의 개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2000년에 접어들면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5.8%가 「부분적(소극적) 개방에 머물 것이다」고 대답하였다.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7.6%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 대다수는 향후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개방화 추세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상유지될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16.8%였지만, 「개방이 후퇴할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2.1%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개방정책 전망에 대하여, 1998년도 여론조사에서는 「소극적 개방」 46.8%, 「전면적 개방」 4.2%, 「현상유지」 30.9%, 「개방 후퇴」라는 응답이 8.5%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는 51.0%로 부정적인 평가보다 다소 우세하였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74.4%로 나타나 1998년도와 비교할 때 북한의 개방정책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시대(세기)에 북한이 좀 더 개방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배경변수에 따라서는 남자(77.3%)가 여자(69.5%)보다, 학력(중졸 이하 66.3%, 고졸 70.5%, 대재 이상 82.7%)이 높을수록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을 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세대, 가구소득, 및 거주지에 따른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4>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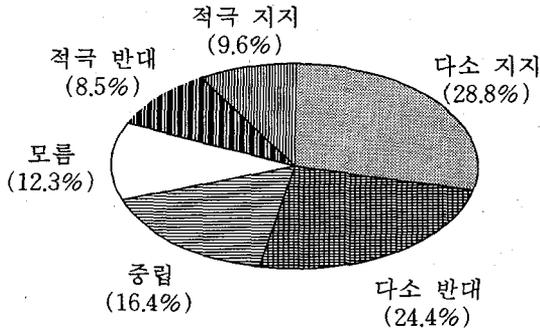
5.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최근 북한은 식량난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등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현재의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 「적극 지지한다」와 「다소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6%와 28.8%, 「다소 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24.4%, 8.5%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38.4%로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 33.0%에 비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6.4%를 차지하였다. 1998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중립적인 응답이 감소한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30세 이하보다는 30세 이상이, 학력이 높을수록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반대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전라도가 북한주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서울/경기지역과 경상도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2-5>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6. 북한 경제난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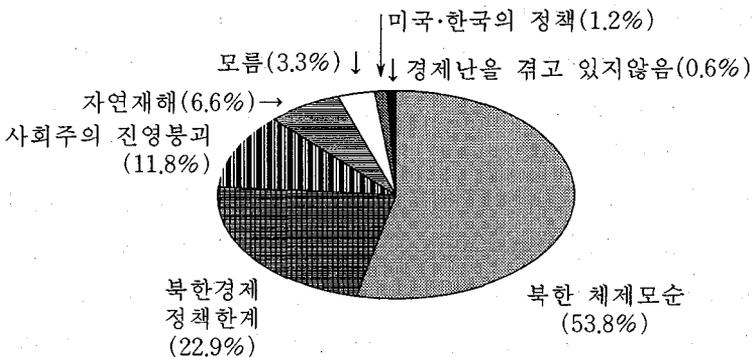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경제정책의 한계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사회주의권 붕괴 및 자연재해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북한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 모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일성부자의 경제정책적 한계」(22.9%), 「사회주의 진영 붕괴」(11.8%), 「자연재해」(6.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국민들의 대다수(76.7%)가 북한 경제난의 원인을 사회주의체제의 모순과 북한의 정책적 한계 등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권 붕괴 및 자연재해 등은 비록 경제난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

고는 있지만 주된 요인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1.2%)을 통한 방해와 같은 외부적 요인은 북한 경제난의 원인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0.6%로서 국민들 모두 북한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1998년도의 결과와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평균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이 나왔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 모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8%였으며, 반면 「자연재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5%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모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이하 42.9%, 고졸 53.0%, 대재이상 60.9%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전라도와 충청도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 모순」을 북한 경제난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강원도는 「김일성 부자의 경제정책적 한계」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림 2-6> 북한 경제난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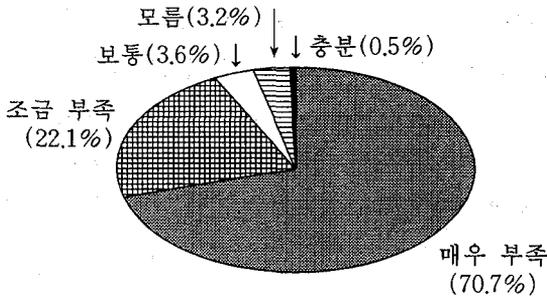


7. 북한의 식량사정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는 대답이 70.7%, 「조금 부족하다」는 22.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92.8%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족하지 않다」와 「충분하다」는 각각 3.6%, 0.5%로 나타나 북한의 식량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4.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995년도 및 1998년도 조사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북한 식량난에 대한 언론의 보도, 우리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식량 및 영농지원, 탈북 주민들의 증언 등에 영향을 받아 여전히 북한의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에 대한 배경 변수별 차이는 남자(67.6%)보다는 여자(73.6%), 30세 이상(68.1%)보다는 30세 이하(76.4%)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매우 부족하다」(53.8%)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조금 부족하다」(40.0%)는 응답이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충청도가 「매우 부족하다」(81.1%)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57.5%)가 가장 낮았다.

<그림 2-7> 북한의 식량 사정



8. 북한의 장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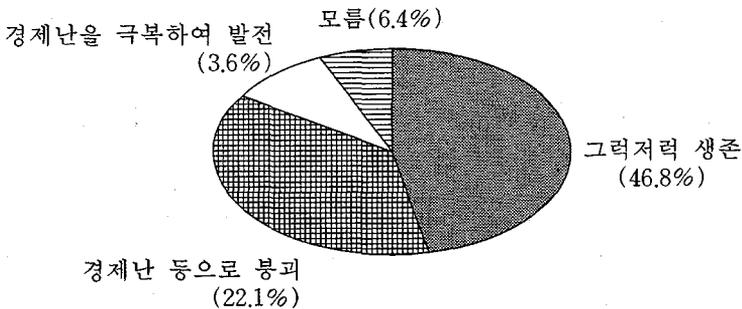
북한의 장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장래에 북한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고 대답한 사람이 37.6%인 반면,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이다」와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46.8%와 9.3%로 나타났다. 이를 붕괴와 생존으로 양분해 본다면 국민들은 향후 북한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995년도 여론조사에서는 50.9%였으며, 1998년도 조사에서는 45.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국민들의 인식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시간이 지날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경제난 등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북한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재해 왔음을 국민들이 직시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응답은 1995년과 1998년에 각각 4.5%, 4.7%였으나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9.3%로 나타나 북한 장래를 단순히 어두운 것으로만 평가하지 않았다.

연령이 낮은 층에서, 즉 30세 이하의 세대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중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전라도는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전라도의 경우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21.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 북한의 장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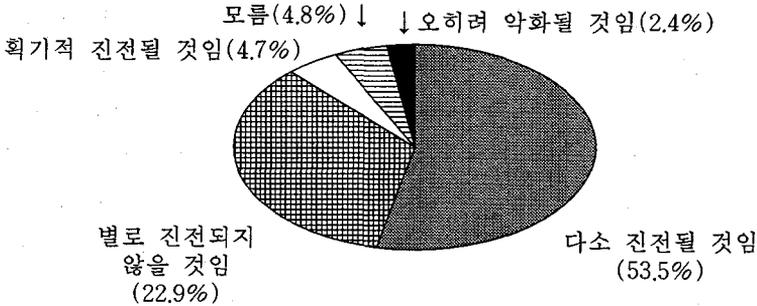
9. 남북한 관계 전망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앞으로 2~3년 내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4.7%)와 「다소 진전될 것이다」(53.5%) 등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58.2%로 나타난 반면,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34.7%)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2.4%) 등 비관적인 전망은 37.1%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2~3년 동안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임을 알 수 있다.

1995년도 조사시(모르겠다는 응답이 없었음)에는 비관적인 대답(55.6%)이 낙관적인 대답(44.4%)보다 높았지만, 1998년도 조사에서는 오히려 낙관적인 대답(53.5%)이 비관적인 대답(43.3%) 보다 우세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과거 조사에 비해 낙관적 대답이 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강산관광사업, 남북한간 농구경기 교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방북과 같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단기적인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전망을 상대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관계 전망에 대한 평가에서 연령, 세대, 거주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9> 남북한 관계 전망



10.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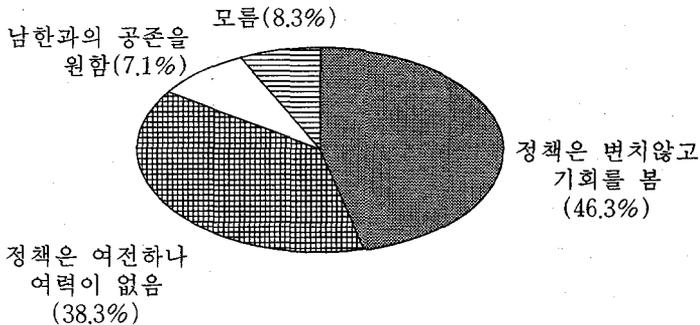
남북관계가 제한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면서도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정책이 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대북정책을 입안·추진하고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6.8%가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여전하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라는 응답이 38.3%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7.1%에 불과하였고, 「모

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사람은 8.3%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5년도(1998년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불변 및 기회 엿봄」 55.2%(58.1%), 「적화통일 여전하나 힘이 없음」 38.1%(30.0%), 「적화통일 포기하고 공존원함」 6.7%(7.0%)와 비교할 때,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의 불변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과반수의 우리 국민이 북한이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의 국력이 약화되고, 남북간에 금강산관광, 남북간 농구 경기 교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방북과 같은 교류·협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이 적화통일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본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이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강원도에서는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림 2-10>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11.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정전 이후 북한은 크고 작은 무력도발을 무수히 일으켜왔다. 1999년 6월 서해에서 발생했던 남북한 해군간의 교전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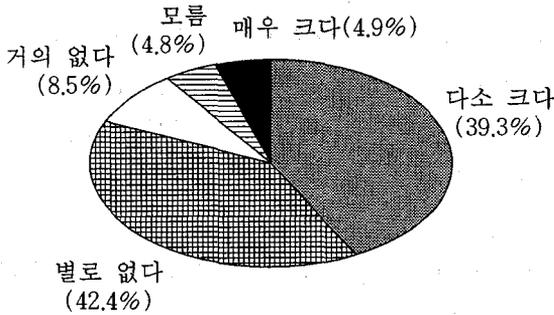
이에 대해 「매우 크다」 4.9%, 「다소 크다」 39.3%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4.2%였다. 반면 「별로 없다」 42.3%, 「거의 없다」 8.5%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50.9%였다. 따라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 적화통일정책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3%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5년도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8%였으며 1998년도에는 57.7%였다. 금년도 비율이 44.2%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달라져 있음을 보여준다. 서해교전이 TV화면을 통해서 생생히 전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금강산관광이나 대중문화교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0대의 거의 과반수(49.5%)가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전쟁을 경험한 세대인 60세 이상은 그 보다 낮은 40.1%의 비율을 보였으며 40대가 34.7%로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성별이나 학력 변수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대와 거주지별로는 흥미로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경기지역, 경상도 및 전라도의 거주자들이 46% 내외의 비율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데 반하여, 충청도와 강원도의 거주자들은 각각 34.4%와 30.0%의 비율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2-11>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12. 북한관련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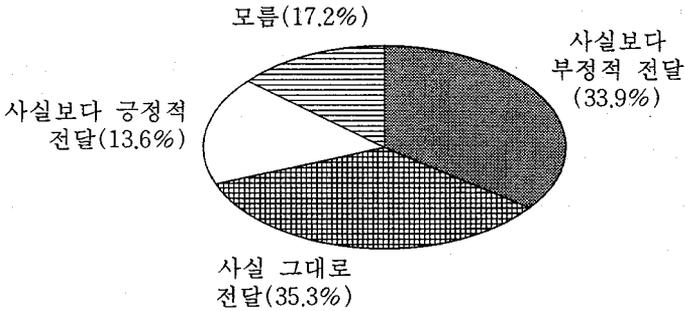
우리 국민은 북한에 관한 정보를 학술서적이나 정부간행물을 통해서 접할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북한에 관한 정보전달자로서 매스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관련 보도에 대한 매스컴의 객관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관련 보도에 관한 매스컴의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남한의 매스컴(신문, 방송, 잡지 등)에 나타나는 북한관련 보도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비율이 35.3%로서 응답자의 1/3을 조금 상회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상황을 사실보다 부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역시 1/3 정도인 33.9%를 차지하였으며, 「북한의 상황을 사실보다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8년도의 조사에서는 「사실 그대로 전달」, 「사실보다 부정적으로 전달」, 「사실보다 긍정적으로 전달」이 각각 30.4%, 42.5%, 13.0%였다. 이를 비교해볼 때, 우리 국민은 아직도 남한 매스컴의 북한관련 보도에 대하여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정보 전달에 대한 매스컴의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매스컴의 비중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보와 관련한 객관적 보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수 중 연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40대가 50~60대에 비해 매스컴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0% 안팎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2> 북한관련 보도내용



13. 북한관련 정보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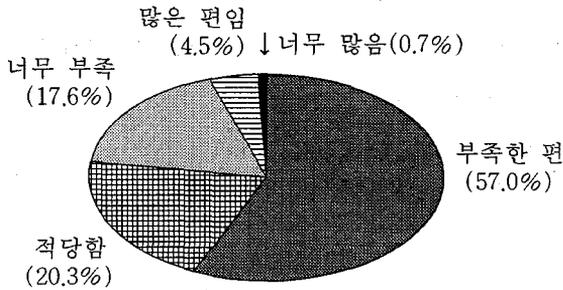
최근 북한 실상에 관한 많은 연구서적과 간행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문이나 방송들도 일정한 지면 및 방송시간을 할애하여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보의 양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실상에 대하여 귀하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가 양적으로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부족한 편이다」와 「너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57.0%와 17.6%로 전체 응답자의 3/4 (74.6%)을 차지한 반면에 「너무 많다」와 「많은 편이다」는 각각 0.7%와 4.5%에 불과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북한실상에 대한 정보량이 부족

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3%가 북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20~30대(약 78%)가 60세 이상(61.3%)보다, 대재 이상(80.1%)이 중졸 이하(64.8%)보다 북한관련 정보 결핍증을 훨씬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거의 모든 신문, 방송, 잡지들이 앞다투어 북한에 관한 보도와 기사를 싣고 있으며, 북한 원전 등 수많은 관련 저작들이 나와 있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북한관련 정보의 전달방법이 더욱 개발되고, 매스컴의 보도내용도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3> 북한관련 정보의 양



14. 남북한 분단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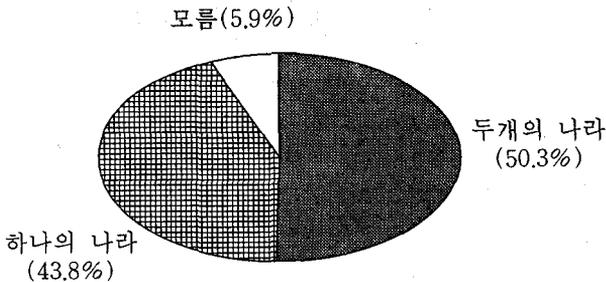
분단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고 남북한은 각각 별도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다. 분단의 장기적인 지속은 남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쌍방에 대해 더욱 멀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 이

와 같은 남북한의 분단 실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0.3%가 「두 개의 나라」라고 대답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남북한이 실제로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나의 나라」라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나타남으로써 오랜 기간의 분단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율은 1998년도의 조사에서 나타난 「두 개의 나라」 49.8%, 「하나의 나라」 43.1%와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수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거주지에서만 나타났다. 경상도와 강원도 거주자들이 타지역 거주자에 비해 남북한을 「하나의 나라」로서 보다는 「두 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4> 남북한 분단 실체



<표 2-1> 북한에 대한 관심

		자주함	가끔함	별로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유의도
전 체		3.3	28.3	40.8	27.7	
성 별	남 자	4.2	32.2	41.5	22.0	$X^2 = 22.748$ $p = .0000$
	여 자	2.5	24.4	40.0	33.1	
연 령	20대	2.7	26.6	45.9	24.8	$X^2 = 22.829$ $p = .0292$
	30대	2.1	27.9	44.2	25.8	
	40대	4.1	33.3	36.5	26.1	
	50대	5.1	26.2	37.1	31.6	
	60세 이상	3.8	28.8	27.5	40.0	
세 대	30세 이하	2.4	27.1	45.6	24.9	$X^2 = 6.194$ $p = .1025$
	30세 이상	3.7	28.8	38.6	28.9	
학 력	중졸이하	4.3	23.8	29.5	42.4	$X^2 = 38.380$ $p = .0000$
	고 졸	3.6	26.5	43.0	26.8	
	대재이상	2.3	33.4	43.3	21.0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2.1	26.2	38.8	32.9	$X^2 = 17.229$ $p = .0452$
	120~199만원	4.2	27.4	38.7	29.6	
	200~299만원	2.1	27.8	44.6	25.4	
	300만원 이상	5.1	33.9	41.2	19.8	
거 주 지	서울/경기	2.9	31.7	41.0	24.4	$X^2 = 26.150$ $p = .0102$
	경 상	3.2	26.5	36.6	33.7	
	전 라	4.9	23.2	40.1	31.7	
	충 청	4.1	27.0	51.6	17.2	
	강 원	2.5	17.5	42.5	37.5	

<표 2-2>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모름	유의도
전 체		19.3	32.6	3.1	28.7	8.2	8.2	
성 별	남 자	18.3	34.6	3.2	30.7	7.3	5.9	X ² = 11.950 p = .0354
	여 자	20.3	30.7	3.0	26.7	9.0	10.3	
연 령	20대	18.1	38.7	2.4	23.6	5.7	11.5	X ² = 40.316 p = .0045
	30대	22.7	33.6	3.3	26.7	7.6	6.1	
	40대	21.6	32.9	3.2	27.9	8.6	5.9	
	50대	14.8	24.5	3.4	37.6	11.4	8.4	
	60세 이상	17.5	26.3	3.8	33.8	10.0	8.8	
세 대	30세 이하	19.6	38.9	2.7	22.8	5.4	10.7	X ² = 22.944 p = .0003
	30세 이상	19.2	29.7	3.3	31.3	9.4	7.0	
학 력	중졸이하	14.3	23.8	4.8	30.0	13.3	13.8	X ² = 60.286 p = .0000
	고 졸	21.9	28.1	2.6	30.6	8.3	8.4	
	대재이상	18.1	44.3	2.8	24.9	5.2	4.7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21.1	27.0	2.5	29.1	5.9	14.3	X ² = 33.848 p = .0035
	120~199만원	18.4	29.6	3.5	31.4	9.7	7.3	
	200~299만원	19.5	36.8	4.2	26.0	7.8	5.7	
	300만원 이상	19.2	39.5	.6	26.0	7.9	6.8	
거 주 지	서울/경기	18.8	33.5	2.7	29.5	7.8	7.7	X ² = 57.242 p = .0000
	경 상	26.5	27.4	3.5	25.9	7.5	9.2	
	전 라	16.2	42.3	2.8	17.6	14.1	7.0	
	충 청	9.0	32.0	3.3	44.3	3.3	8.2	
	강 원	7.5	32.5	5.0	32.5	12.5	10.0	

<표 2-3> 북한의 변화 정도

		많이 변하고 있음	약간 변하고 있음	별로 변하지 않았음	거의 변하지 않았음	모름	유의도
전 체		12.1	53.5	19.3	8.9	6.3	
성 별	남 자	13.7	55.6	18.5	7.8	4.4	$X^2 = 11.856$ $p = .0184$
	여 자	10.5	51.5	20.0	10.0	8.0	
연 령	20대	10.6	54.7	16.3	10.6	7.9	$X^2 = 25.535$ $p = .0609$
	30대	12.4	52.4	22.7	8.5	3.9	
	40대	10.8	54.5	22.1	7.7	5.0	
	50대	16.0	55.3	14.3	6.8	7.6	
	60세 이상	8.8	45.0	23.8	13.8	8.8	
세 대	30세 이하	10.7	55.8	15.3	10.7	7.5	$X^2 = 9.124$ $p = .0580$
	30세 이상	12.7	52.5	21.0	8.1	5.7	
학 력	중졸이하	15.7	50.0	13.8	8.6	11.9	$X^2 = 28.561$ $p = .0003$
	고 졸	10.3	52.0	22.0	10.3	5.5	
	대재이상	13.0	57.8	17.9	7.0	4.4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9.3	52.7	19.4	9.7	8.9	$X^2 = 14.545$ $p = .2672$
	120~199만원	12.6	52.4	21.2	7.5	6.2	
	200~299만원	11.1	56.9	16.5	9.6	6.0	
	300만원 이상	16.4	50.8	19.2	10.2	3.4	
거 주 지	서울/경기	14.6	50.1	20.8	8.9	5.6	$X^2 = 41.398$ $p = .0004$
	경 상	6.1	57.1	17.9	10.4	8.6	
	전 라	19.7	54.9	16.2	7.0	2.1	
	충 청	9.8	59.8	19.7	6.6	4.1	
	강 원	10.0	45.0	20.0	10.0	15.0	

〈표 2-4〉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

		전면적 개방	부분적 개방	현상 유지	개방 후퇴	모름	유의도
전 체		7.6	65.8	16.8	2.1	7.8	
성 별	남 자	7.5	69.8	16.6	2.2	3.9	$X^2 = 25.296$ $p = .0000$
	여 자	7.7	61.8	17.0	2.0	11.5	
연 령	20대	7.6	67.1	16.0	1.8	7.6	$X^2 = 28.533$ $p = .0272$
	30대	6.7	69.1	15.5	3.3	5.5	
	40대	5.4	68.0	19.4	1.8	5.4	
	50대	9.7	59.9	19.0	.8	10.5	
	60세 이상	11.3	57.5	12.5	2.5	16.3	
세 대	30세 이하	7.2	67.3	16.4	1.6	7.5	$X^2 = .981$ $p = .9126$
	30세 이상	7.7	65.1	17.0	2.3	7.9	
학 력	중졸이하	8.1	56.2	15.7	1.9	18.1	$X^2 = 57.383$ $p = .0000$
	고졸	7.3	63.2	19.9	2.3	7.3	
	대제이상	7.8	74.9	12.7	1.8	2.8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5.1	63.3	19.8	2.1	9.7	$X^2 = 10.162$ $p = .6017$
	120~199만원	9.1	65.0	15.5	2.9	7.5	
	200~299만원	7.5	67.4	16.2	1.5	7.5	
	300만원 이상	7.3	67.8	17.5	1.1	6.2	
거 주 지	서울/경기	8.0	62.5	17.9	2.6	9.1	$X^2 = 14.7458$ $p = .5433$
	경상	5.8	67.1	18.7	1.2	7.2	
	전라	7.7	71.1	14.1	2.1	4.9	
	충청	10.7	68.0	12.3	2.5	6.6	
	강원	7.5	72.5	10.0	2.5	7.5	

<표 2-5> 북한주민들의 현체제 지지도

		적극 지지	다소 지지	중립	다소 반대	적극 반대	모름	유의도
전 체		9.6	28.8	16.4	24.4	8.5	12.3	
성 별	남 자	10.2	31.2	16.3	24.2	8.5	9.7	$X^2 = 9.026$ $p = .1079$
	여 자	9.0	26.6	16.6	24.6	8.5	14.8	
연 령	20대	5.7	27.2	17.5	29.0	8.5	12.1	$X^2 = 45.761$ $p = .0008$
	30대	6.7	34.5	14.2	23.0	9.4	12.1	
	40대	11.7	29.3	18.9	23.9	7.7	8.6	
	50대	17.3	24.5	16.5	21.1	7.6	13.1	
	60세 이상	8.8	23.8	13.8	22.5	10.0	21.3	
세 대	30세 이하	5.9	29.2	17.7	28.2	7.8	11.3	$X^2 = 12.094$ $p = .0335$
	30세 이상	11.2	28.7	15.8	22.7	8.8	12.7	
학 력	중졸이하	11.9	23.8	15.2	22.9	8.6	17.6	$X^2 = 23.430$ $p = .0092$
	고 졸	9.9	27.3	14.9	26.0	9.9	11.9	
	대재이상	7.8	33.9	19.4	22.8	6.2	9.8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12.2	28.7	16.0	22.8	6.3	13.9	$X^2 = 9.843$ $p = .8295$
	120~199만원	8.8	27.9	15.9	24.8	10.4	12.2	
	200~299만원	9.6	29.0	17.1	23.7	9.0	11.7	
	300만원 이상	7.9	31.1	16.9	27.1	5.6	11.3	
거 주 지	서울/경기	10.7	29.7	17.7	20.9	9.1	11.8	$X^2 = 42.563$ $p = .0023$
	경 상	8.1	32.3	15.0	26.8	5.8	12.1	
	전 라	7.0	21.8	17.6	29.6	14.1	9.9	
	충 청	12.3	24.6	15.6	30.3	6.6	10.7	
	강 원	7.5	25.0	10.0	15.0	10.0	32.5	

<표 2-6> 북한 경제난의 원인

		사회 주의 진영 붕괴	자연 재해	미 국 의 정 책	북 한 사 회 의 체 제 모 순	북 한 정 책 한 계	경 제 난 고 를 겪 어 있 지 않 음	모 름	유의도
전 체		11.8	6.6	1.2	53.8	22.9	6	3.3	
성 별	남 자	13.9	5.9	1.5	55.9	20.3	7	1.7	X ² = 19.794 p = .0030
	여 자	9.7	7.2	8	51.6	25.4	5	4.8	
연 령	20대	14.5	4.2	.9	55.6	22.7	.3	1.8	X ² = 59.152 p = .0000
	30대	11.2	7.3	1.5	55.8	21.5	.9	1.8	
	40대	10.4	6.8	.9	55.4	23.0	.5	3.2	
	50대	9.7	5.1	1.7	53.6	25.3	.4	4.2	
	60세 이상	12.5	17.5	.0	33.8	22.5	1.3	12.5	
세 대	30세 이하	14.2	4.0	1.3	54.7	23.9	.3	1.6	X ² = 14.030 p = .0293
	30세 이상	10.6	7.7	1.1	53.3	22.5	.7	4.0	
학 력	중졸이하	11.0	11.0	.5	42.9	25.7	1.0	8.1	X ² = 42.871 p = .0000
	고 졸	12.7	5.6	1.2	53.0	24.5	.3	2.6	
	대재이상	10.6	5.7	1.6	60.9	18.9	.8	1.6	
가 구 소 득	120원미만	10.1	8.9	.8	46.4	27.8	.8	5.1	X ² = 23.414 p = .1751
	120~199원	13.5	5.3	.9	53.8	23.9	.0	2.7	
	200~299원	11.4	6.6	1.8	56.3	19.8	1.2	3.0	
	300원 이상	10.2	6.8	1.1	58.8	19.8	.6	2.8	
거 주 지	서울/경기	13.3	5.5	1.5	53.9	22.4	.9	2.6	X ² = 48.351 p = .0022
	경 상	12.4	10.4	1.4	48.7	21.6	.0	5.5	
	전 라	9.2	4.9	.7	62.0	20.4	.7	2.1	
	충 청	8.2	2.5	.0	62.3	25.4	.0	1.6	
	강 원	5.0	7.5	.0	40.0	42.5	2.5	2.5	

<표 2-7> 북한의 식량사정

		매우 부족	조금 부족	보통	충분	모름	유의도
전 체		70.7	22.1	3.6	.5	3.2	
성별	남 자	67.6	25.6	2.7	.7	3.4	X ² = 11.369 p = .0227
	여 자	73.6	18.7	4.4	.3	3.0	
연령	20대	76.4	15.7	3.3	1.2	3.3	X ² = 50.079 p = .0000
	30대	72.7	23.3	2.1	.3	1.5	
	40대	64.0	28.4	5.0	.5	2.3	
	50대	71.7	17.3	5.1	.0	5.9	
	60세 이상	53.8	40.0	2.5	.0	3.8	
세대	30세 이하	76.4	16.4	2.9	1.1	3.2	X ² = 14.727 p = .0053
	30세 이상	68.1	24.7	3.9	.2	3.1	
학력	중졸이하	66.7	22.9	5.7	.0	4.8	X ² = 12.020 p = .1503
	고 졸	69.4	22.8	3.8	.7	3.3	
	대재이상	74.9	20.5	2.1	.5	2.1	
가구 소득	120만원 미만	73.0	19.0	4.6	.0	3.4	X ² = 8.014 p = .7839
	120~199만원	69.2	23.0	3.3	.9	3.5	
	200~299만원	70.7	22.2	4.2	.3	2.7	
	300만원 이상	71.2	23.7	1.7	.6	2.8	
거주지	서울/경기	69.6	22.0	3.3	.4	4.7	X ² = 34.022 p = .0054
	경 상	69.2	24.5	4.9	.6	.9	
	전 라	73.2	21.1	3.5	.0	2.1	
	충 청	81.1	14.8	.8	1.6	1.6	
	강 원	57.5	27.5	5.0	.0	10.0	

<표 2-8> 북한의 장래

		경제난 등으로 붕괴	그럭저럭 생존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	모름	유의도
전 체		37.6	46.8	9.3	6.4	
성 별	남 자	36.8	48.0	10.3	4.9	$X^2 = 6.132$ $p = .1053$
	여 자	38.4	45.6	8.2	7.9	
연 령	20대	43.8	43.8	7.6	4.8	$X^2 = 43.677$ $p = .0000$
	30대	40.0	48.8	7.6	3.6	
	40대	31.5	50.0	14.0	4.5	
	50대	32.9	46.0	10.1	11.0	
	60세 이상	32.5	43.8	7.5	16.3	
세 대	30세 이하	44.0	44.5	7.0	4.6	$X^2 = 12.409$ $p = .0061$
	30세 이상	34.7	47.8	10.3	7.3	
학 력	중졸이하	34.3	40.0	11.9	13.8	$X^2 = 29.842$ $p = .0000$
	고졸	38.9	48.0	7.6	5.5	
	대재이상	37.3	48.4	10.4	3.9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34.2	47.7	8.9	9.3	$X^2 = 9.882$ $p = .3600$
	120~199만원	40.7	44.7	9.1	5.5	
	200~299만원	35.0	47.9	9.9	7.2	
	300만원 이상	39.0	48.6	9.0	3.4	
거 주 지	서울/경기	41.5	44.3	7.7	6.6	$X^2 = 44.154$ $p = .0000$
	경상	36.0	49.6	6.6	7.8	
	전라	31.0	47.2	21.1	.7	
	충청	33.6	48.4	11.5	6.6	
	강원	32.5	50.0	5.0	12.5	

<표 2-9> 남북한 관계 전망

		확기적 진전될 것임	다소 진전될 것임	별로 되지 않을 것임	오히려 악화될 것임	모름	유의도
전 체		4.7	53.5	34.7	2.4	4.8	
성 별	남 자	4.7	55.9	33.7	2.7	2.9	$X^2 = 10.544$ $p = .0321$
	여 자	4.6	51.1	35.6	2.1	6.6	
연 령	20대	4.8	52.3	34.7	3.0	5.1	$X^2 = 15.703$ $p = .4738$
	30대	5.2	53.0	35.5	3.0	3.3	
	40대	2.7	58.1	34.2	1.4	3.6	
	50대	5.5	50.2	36.7	2.1	5.5	
	60세 이상	5.0	57.5	26.3	1.3	10.0	
세 대	30세 이하	4.8	52.5	34.6	3.2	4.8	$X^2 = 1.563$ $p = .8152$
	30세 이상	4.6	53.9	34.7	2.1	4.7	
학 력	중졸이하	4.8	50.5	34.8	2.4	7.6	$X^2 = 0.162$ $p = .0097$
	고 졸	4.1	50.2	37.6	2.6	5.5	
	대재이상	5.4	60.4	30.1	2.1	2.1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3.8	46.8	40.5	2.1	6.8	$X^2 = 20.314$ $p = .0613$
	120~199만원	5.3	54.0	33.4	2.7	4.6	
	200~299만원	5.4	52.7	34.7	3.6	3.6	
	300만원 이상	2.8	62.7	29.9	.0	4.5	
거 주 지	서울/경기	5.3	51.9	33.3	3.5	6.0	$X^2 = 22.555$ $p = .1261$
	경 상	4.0	54.5	35.2	1.4	4.9	
	전 라	6.3	57.0	35.2	1.4	.0	
	충 청	1.6	54.9	39.3	.8	3.3	
	강 원	5.0	50.0	32.5	5.0	7.5	

<표 2-10>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남한과의 공존을 원함	정책은 여전하나 여력 없음	정책은 변치 않고 기회를 엿봄	모름	유의도
전 체		7.1	38.3	46.3	8.3	
성 별	남 자	7.8	42.0	44.6	5.6	$X^2 = 16.408$ $p = .0009$
	여 자	6.4	34.6	48.0	11.0	
연 령	20대	6.6	38.4	43.2	11.8	$X^2 = 16.757$ $p = .1589$
	30대	7.9	39.4	46.4	6.4	
	40대	5.9	41.0	48.6	4.5	
	50대	7.2	37.1	47.3	8.4	
	60세 이상	8.8	28.8	50.0	12.5	
세 대	30세 이하	6.7	37.8	44.5	11.0	$X^2 = 5.120$ $p = .1631$
	30세 이상	7.3	38.5	47.2	7.1	
학 력	중졸이하	8.6	29.5	51.0	11.0	$X^2 = 31.368$ $p = .0000$
	고 졸	5.3	35.8	50.7	8.3	
	대제이상	9.1	46.9	37.0	7.0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5.1	32.9	52.3	9.7	$X^2 = 15.792$ $p = .0713$
	120~199만원	7.7	38.1	46.7	7.5	
	200~299만원	6.0	43.7	43.4	6.9	
	300만원 이상	10.2	35.6	42.9	11.3	
거 주 지	서울/경기	8.6	38.6	44.4	8.4	$X^2 = 19.113$ $p = .0858$
	경 상	5.8	37.2	48.4	8.6	
	전 라	9.2	34.5	52.1	4.2	
	충 청	4.1	45.9	40.2	9.8	
	강 원	.0	32.5	52.5	15.0	

<표 2-11>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별로 없다	거의 없다	모름	유의도
전 체		4.9	39.3	42.4	8.5	4.8	
성 별	남 자	5.6	39.0	43.6	8.6	3.2	$X^2 = 7.750$ $p = .1011$
	여 자	4.3	39.7	41.3	8.4	6.4	
연 령	20대	6.0	43.5	38.7	7.9	3.9	$X^2 = 28.366$ $p = .0285$
	30대	4.5	39.4	45.5	6.7	3.9	
	40대	4.1	30.6	51.8	9.9	3.6	
	50대	5.1	42.6	35.0	9.3	8.0	
	60세 이상	3.8	36.3	41.3	12.5	6.3	
세 대	30세 이하	5.6	43.7	39.1	7.8	3.8	$X^2 = 6.192$ $p = .1852$
	30세 이상	4.6	37.4	43.9	8.8	5.3	
학 력	중졸이하	5.7	37.6	36.7	11.9	8.1	$X^2 = 17.026$ $p = .0298$
	고 졸	5.3	40.7	41.4	7.6	5.0	
	대재이상	3.9	38.1	47.2	8.0	2.8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5.9	40.1	38.8	8.4	6.8	$X^2 = 7.419$ $p = .8287$
	120~199만원	4.6	38.9	43.6	8.0	4.9	
	200~299만원	3.9	41.3	41.6	9.0	4.2	
	300만원 이상	6.2	35.6	45.8	9.0	3.4	
거 주 지	서울/경기	6.0	39.7	41.3	6.9	6.0	$X^2 = 32.248$ $p = .0092$
	경 상	2.9	42.9	42.4	8.9	2.9	
	전 라	5.6	41.5	43.7	7.7	1.4	
	충 청	4.9	29.5	44.3	14.8	6.6	
	강 원	5.0	25.0	47.5	10.0	12.5	

<표 2-12> 북한관련 보도내용

		사실보다 부정적 전달	사실 그대로 전달	사실보다 긍정적 전달	모름	유의도
전 체		33.9	35.3	13.6	17.2	
성 별	남 자	35.4	34.7	13.4	16.4	X ² = 1.278 p = .7341
	여 자	32.5	35.9	13.8	17.9	
연 령	20대	34.4	32.9	11.8	20.8	X ² = 24.645 p = .0165
	30대	37.6	36.7	10.9	14.8	
	40대	38.3	29.7	15.3	16.7	
	50대	26.6	38.8	18.6	16.0	
	60세 이상	26.3	45.0	12.5	16.3	
세 대	30세 이하	33.5	33.5	11.5	21.4	X ² = 7.995 p = .0461
	30세 이상	34.1	36.2	14.5	15.2	
학 력	중졸이하	29.0	37.6	17.1	16.2	X ² = 6.671 p = .3522
	고 졸	33.4	36.3	13.1	17.2	
	대재이상	37.3	32.6	12.4	17.6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33.3	32.5	15.6	18.6	X ² = 5.610 p = .7781
	120~199만원	33.6	38.1	12.4	15.9	
	200~299만원	35.0	34.1	14.7	16.2	
	300만원 이상	33.3	34.5	11.9	20.3	
거 주 지	서울/경기	33.2	35.2	12.2	19.5	X ² = 17.711 p = .1247
	경 상	36.6	35.2	11.8	16.4	
	전 라	37.3	35.9	14.1	12.7	
	충 청	28.7	34.4	23.0	13.9	
	강 원	25.0	40.0	17.5	17.5	

<표 2-13> 북한관련 정보의 양

		너무 많음	많은 편임	적당함	부족한편	너무 부족	유의도
전 체		.7	4.5	20.3	57.0	17.6	
성 별	남 자	.7	4.7	15.8	59.7	19.2	$X^2 = 14.766$ $p = .0052$
	여 자	.7	4.3	24.6	54.4	16.1	
연 령	20대	.3	4.5	17.8	59.8	17.5	$X^2 = 26.508$ $p = .0472$
	30대	.3	5.2	16.4	60.9	17.3	
	40대	1.4	2.3	21.2	56.3	18.9	
	50대	1.3	5.1	24.1	54.0	15.6	
	60세 이상	.0	6.3	32.5	40.0	21.3	
세 대	30세 이하	.3	4.8	18.5	59.5	16.9	$X^2 = 2.986$ $p = .5600$
	30세 이상	.8	4.4	21.0	55.9	17.9	
학 력	중졸이하	1.0	5.7	28.6	44.8	20.0	$X^2 = 22.493$ $p = .0040$
	고 졸	.7	4.1	20.7	58.4	16.1	
	대재이상	.5	4.4	15.0	61.4	18.7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4	4.6	22.4	57.0	15.6	$X^2 = 10.244$ $p = .5945$
	120~199만원	.4	3.8	19.9	56.2	19.7	
	200~299만원	.6	6.3	19.5	56.9	16.8	
	300만원 이상	1.7	2.8	19.8	59.3	16.4	
거 주 지	서울/경기	.7	4.2	18.4	57.0	19.7	$X^2 = 33.883$ $p = .0056$
	경 상	.3	5.5	21.6	56.8	15.9	
	전 라	2.1	6.3	15.5	52.8	23.2	
	충 청	.0	2.5	25.4	64.8	7.4	
	강 원	.0	.0	35.0	50.0	15.0	

<표 2-14> 남북한 분단 실체

		하나의 나라	두개의 나라	모름	유의도
전 체		43.8	50.3	5.9	
성 별	남 자	46.1	48.3	5.6	$X^2 = 2.441$ $p = .2950$
	여 자	41.6	52.1	6.2	
연 령	20대	40.2	52.3	7.6	$X^2 = 5.422$ $p = .7115$
	30대	43.0	51.2	5.8	
	40대	47.3	47.7	5.0	
	50대	46.8	48.5	4.6	
	60세 이상	43.8	50.0	6.3	
세 대	30세 이하	40.8	51.5	7.8	$X^2 = 4.493$ $p = .1057$
	30세 이상	45.2	49.7	5.1	
학 력	중졸이하	47.1	48.1	4.8	$X^2 = 1.624$ $p = .8043$
	고 졸	43.5	50.5	6.0	
	대재이상	42.5	51.0	6.5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46.8	48.1	5.1	$X^2 = 4.818$ $p = .5673$
	120~199만원	42.0	50.4	7.5	
	200~299만원	44.3	50.3	5.4	
	300만원 이상	43.5	52.5	4.0	
거 주 지	서울/경기	46.1	45.0	8.9	$X^2 = 29.5485$ $p = .0002$
	경 상	38.9	57.3	3.7	
	전 라	48.6	47.9	3.5	
	충 청	45.1	54.1	.8	
	강 원	35.0	57.5	7.5	

Ⅲ. 통일관련 주변 환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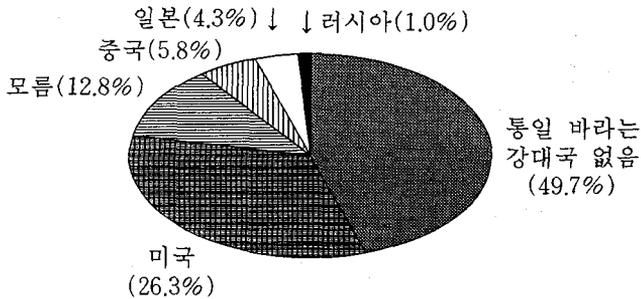
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나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볼 때,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우리의 통일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거의 과반수(49.7%)가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8년도의 조사결과에서도 51.3%가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이 없다고 대답하였던 것을 볼 때, 국민들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변 4국 중에서는 미국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서 중국(5.8%), 일본(4.3%), 러시아(1.0%) 등 여타 3개국을 합친 비율(11.1%)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1998년의 조사결과도 미국 25.7%, 여타 3국 합계 12.5%로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여타 3개국에 대하여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를 강화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이 없다는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미국이 통일을 바라는 국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로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거주자들이 중국이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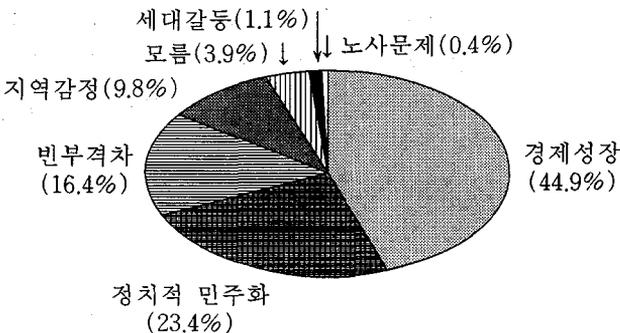
2. 통일기반 조성과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함께 튼튼한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국내적인 기반의 조성은 통일의 기회가 도래하였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대내적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4.9%가 「경제성장」을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정치적 민주화」(23.4%), 「빈부격차」(16.4%), 「지역감정」(9.8%), 「세대갈등」(1.1%), 「노사문제」(0.4%) 등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1995년과 1998년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다른 요인들보다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내적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다만 경제성장을 지적한 비율이 1995년 36.3%, 1998년 51.4%, 1999년 44.9%였으며, 정치적 민주화를 지적한 비율은 1995년 36.9%, 1998년 24.4%, 1999년 23.4%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는 지난 2년간 우리의 IMF 관리체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30~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치적 민주화를 다소 중시하였으며,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역시 정치적 민주화를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다. 그리고 거주지별로는 충청도 거주자들이 전라도 및 강원도 거주자들에 비해 정치적 민주화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였다.

<그림 3-2> 통일기반 조성 과제



3. 통일 예상시기

독일과 예멘 등 분단국이 통일된 후 남북한만이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언제 통일이 달성될 것인가는 항시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의 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예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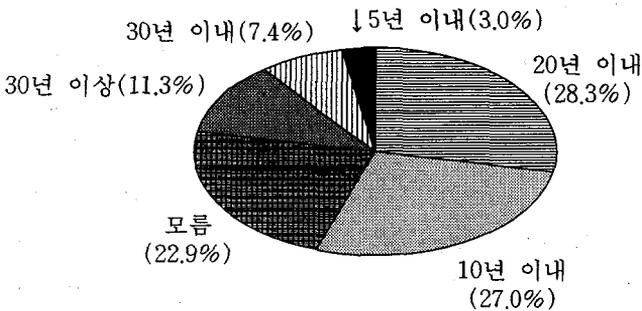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해 「20년 이내」가 28.3%, 「10년 이내」가 27.0%, 「5년 이내」가 3.0%로서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58.3%)이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30년 이상」과 「30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3%, 7.4%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2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8년도의 조사결과는 「10년 이내」가 28.3%, 「20년 이내」가 27.1%, 「5년 이내」가 4.7%로서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비율인 60.1%의 응답자가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같은 질문에 대한 1994년과 1995년의 여론조사의 결과와 1998년과 1999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조기통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4년과 1995년의 조사에서는 통일이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각각 73.8%(누계), 50.4%(누계)였으나,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33.0%(누계)와 30.0%(누계)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조기통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것은 1994~95년 당시에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 상황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기통일의 기대가 높았으나, 북한의 내부 상황이 점차로 안정화되고 남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서 조기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수별로는 성별, 학력, 거주지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조기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거주지별로 강원도 및 전라도 거주자들이 타지역의 거주자들보다 향후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통일 예상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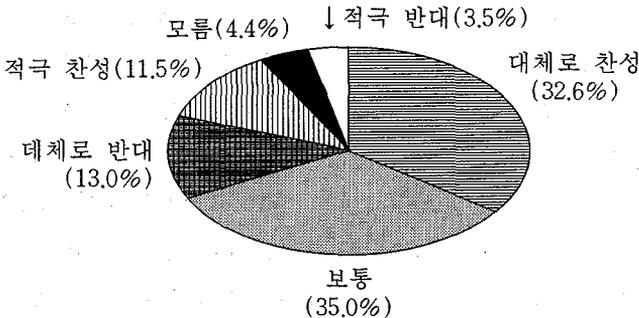
4.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

1990년대에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개발문제로 북한의 기대만큼 진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9년 9월 미·북 베를린합의로 양자간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북·일간에도 수교교섭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중요 요소의 하나로써 인식하고 있다. 북·미 및 북·일수교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미국간의 수교 및 북한·일본간의 수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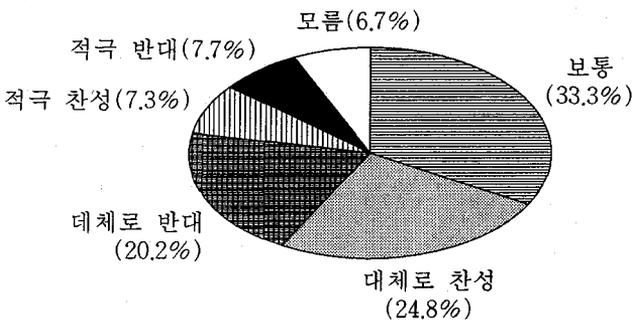
북·미수교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적극 찬성한다」 11.5%,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2.6%)인데 반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적극 반대한다」 3.5%,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13.0%)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북·미수교를 반대하기보다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저 그렇다」는 견해는 35.0%로 상당히 높았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북·미수교를 지지하는 비율은 30~50대의 연령층이 20대 및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 38.1%, 고졸 41.8%, 대재 이상 51.1%)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라도(59.1%) 거주자가 강원도(27.5%), 서울/경기지역(41.3%) 및 경상도(41.5%) 거주자들보다 북·미수교를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거주자들도 51.6%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북·미수교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3-4-1> 북·미수교



북·일수교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1%(「적극 찬성한다」 7.3%,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24.8%)이며,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9%(「적극 반대한다」 7.7%,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20.2%)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기는 하지만 북·미수교와는 달리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는 33.3%였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북·일수교를 찬성하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지에서는 북·미수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라도(43.7%) 거주자들이 강원도(15.0%), 서울/경기지역(29.3%), 경상도(33.1%) 거주자들보다 북·일수교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충청도 거주자들은 북·일수교(34.4%)에 대해서는 북·미수교(51.6%)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림 3-4-2> 북·일수교



전반적으로 볼 때, 북·미수교에 비해 북·일수교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북·미수교가 북·일수교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한 질문에 대한 1998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북·미수교에 대한 찬성비율이 51.0%였고, 북·일수교에 대한 찬성비율은 40.1%였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에는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5.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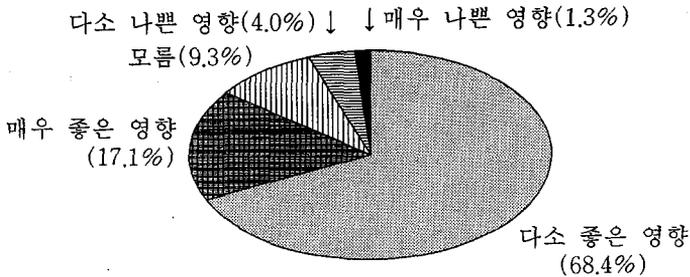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우리 경제는 전국민적 노력에 의해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경제회복과 남북관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최근 한국의 경제회복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다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68.4%,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17.1%로 절대 다수(85.5%)의 국민들은 한국의 경제회복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대답은 5.3%(「다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0%,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에 불과하였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9.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1998년 여론조사에서는 “귀하는 최근 한국의 IMF체제 등장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76.8%)는 IMF체제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와 지난해 결과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성별, 연령, 세대, 학력, 가구소득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라도와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회복이 남북관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 3-5>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6.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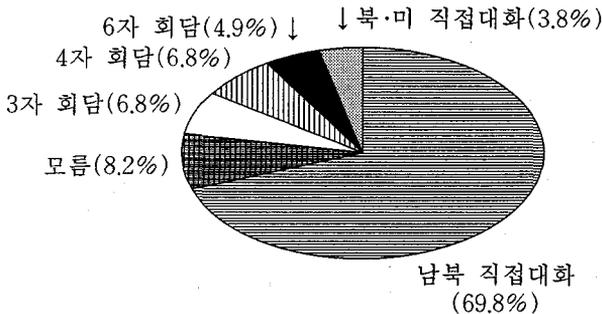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의 2/3이상(69.8%)이 「남한과 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지지하였다. 한국이 포함된 「남북한과 미국의 3자대화」는 6.7%,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대화」는 6.8%, 그리고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자대화」는 4.9%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한국을 배제한 「북

한과 미국과의 직접대화」는 3.8%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8년 여론조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남한과 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지적인 응답자가 71.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남북 당사자 원칙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유지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거나, 한반도 문제가 지나치게 국제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간 직접 대화에 대한 선호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별로 볼 때, 남북한간 직접 대화를 충청도(84.4%)는 강력하게 지지하나, 강원도(55.0%)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매우 낮다. 남북한간 직접 대화에 대한 지지도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외 연령, 세대, 가구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3-6>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표 3-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통일 바라는 강대국 없음	모름	유의도
전 체		26.3	4.3	5.8	1.0	49.7	12.8	
성 별	남 자	22.7	5.3	6.3	1.2	57.8	6.8	$X^2 = 57.426$ $p = .0000$
	여 자	29.8	3.4	5.4	.8	41.8	18.7	
연 령	20대	19.3	4.8	6.0	.6	56.8	12.4	$X^2 = 59.826$ $p = .0000$
	30대	20.9	4.5	6.4	1.5	55.2	11.5	
	40대	26.6	4.1	6.3	1.4	49.5	12.2	
	50대	38.4	4.2	3.8	.0	39.7	13.9	
	60세 이상	41.3	2.5	7.5	2.5	27.5	18.8	
세 대	30세 이하	18.2	5.1	6.4	.8	57.1	12.3	$X^2 = 20.893$ $p = .0008$
	30세 이상	30.0	4.0	5.6	1.1	46.3	13.1	
학 력	중졸이하	41.9	2.4	6.2	.0	32.4	17.1	$X^2 = 66.964$ $p = .0000$
	고 졸	24.8	5.6	5.0	1.2	49.0	14.4	
	대재이상	20.2	3.4	7.0	1.3	60.1	8.0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34.2	3.0	2.5	1.7	44.3	14.3	$X^2 = 22.525$ $p = .0947$
	120~199만원	25.9	4.0	6.6	.7	50.9	11.9	
	200~299만원	23.7	5.7	6.3	.9	49.1	14.4	
	300만원 이상	22.0	4.5	7.3	1.1	54.8	10.2	
거 주 지	서울/경기	23.7	3.5	6.0	1.8	50.5	14.6	$X^2 = 42.101$ $p = .0026$
	경 상	22.8	6.6	5.2	.6	52.7	12.1	
	전 라	31.0	3.5	10.6	.0	45.8	9.2	
	충 청	40.2	3.3	2.5	.0	42.6	11.5	
	강 원	35.0	2.5	2.5	.0	47.5	12.5	

<표 3-2> 통일기반 조성 과제

		정치적 민주화	경제 성장	지역 감정	빈부 격차	노사 문제	세대 갈등	모름	유의도
전 체		23.4	44.9	9.8	16.4	.4	1.1	3.9	
성 별	남 자	24.4	46.8	8.8	17.1	.2	1.0	1.7	$X^2 = 19.335$ $p = .0036$
	여 자	22.5	43.1	10.8	15.7	.7	1.1	6.1	
연 령	20대	20.5	43.2	12.1	19.9	.9	.9	2.4	$X^2 = 45.585$ $p = .0049$
	30대	27.3	46.4	7.3	15.2	.6	.9	2.4	
	40대	25.2	41.4	12.6	16.7	.0	1.8	2.3	
	50대	21.1	48.5	8.9	13.5	.0	.8	7.2	
	60세 이상	21.3	45.0	6.3	15.0	.0	1.3	11.3	
세 대	30세 이하	21.7	43.7	11.5	19.0	.8	.8	2.4	$X^2 = 10.153$ $p = .1183$
	30세 이상	24.2	45.5	9.1	15.2	.2	1.2	4.6	
학 력	중졸이하	21.4	43.8	9.5	13.8	.0	1.9	9.5	$X^2 = 37.657$ $p = .0001$
	고 졸	21.5	44.5	10.8	17.9	.3	1.0	4.0	
	대재이상	27.5	46.1	8.5	15.5	.8	.8	.8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21.5	45.1	9.3	16.5	.4	1.7	5.5	$X^2 = 15.140$ $p = .6522$
	120~199만원	20.1	48.9	8.8	17.3	.4	.9	3.5	
	200~299만원	27.5	41.0	10.2	15.9	.3	.9	4.2	
	300만원 이상	26.6	41.8	12.4	15.3	.6	1.1	2.3	
거 주 지	서울/경기	22.4	41.7	9.8	19.7	.7	1.1	4.6	$X^2 = 41.123$ $p = .0161$
	경 상	24.5	45.2	10.4	13.8	.3	.9	4.9	
	전 라	19.0	47.9	16.2	14.1	.0	1.4	1.4	
	충 청	32.0	52.5	2.5	11.5	.0	.8	.8	
	강 원	17.5	52.5	5.0	17.5	.0	2.5	5.0	

<표 3-3> 통일 예상시기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모름	유의도
전 체		3.0	27.0	28.3	7.4	11.3	22.9	
성 별	남 자	2.5	29.0	31.9	7.8	9.0	19.8	X ² = 18.315 p = .0025
	여 자	3.4	25.1	24.9	7.0	13.6	25.9	
연 령	20대	2.1	27.5	25.7	9.4	13.0	22.4	X ² = 18.917 p = .5272
	30대	3.9	28.2	32.4	7.0	9.7	18.8	
	40대	2.3	27.5	27.5	7.2	12.2	23.4	
	50대	4.2	24.9	27.4	5.1	10.5	27.8	
	60세 이상	1.3	25.0	27.5	8.8	11.3	26.3	
세 대	30세 이하	2.7	27.9	26.3	8.8	12.1	22.3	X ² = 3.002 p = .6995
	30세 이상	3.1	26.6	29.3	6.8	11.0	23.2	
학 력	중졸이하	2.9	21.9	25.2	6.7	12.9	30.5	X ² = 26.782 p = .0028
	고 졸	3.5	26.8	26.5	6.6	11.8	24.8	
	대재이상	2.3	30.1	32.9	9.1	9.8	15.8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3.4	25.7	23.2	7.6	11.0	29.1	X ² = 20.518 p = .1529
	120~199만원	3.1	25.4	32.1	5.5	11.9	21.9	
	200~299만원	2.7	28.7	30.2	8.1	11.1	19.2	
	300만원 이상	2.8	29.4	22.0	10.7	10.7	24.3	
거 주 지	서울/경기	3.6	27.7	30.6	6.6	8.2	23.3	X ² = 46.996 p = .0005
	경 상	2.3	22.5	25.4	10.4	15.6	23.9	
	전 라	.7	35.2	27.5	3.5	10.6	22.5	
	충 청	4.9	22.1	33.6	9.0	13.1	17.2	
	강 원	2.5	42.5	10.0	2.5	15.0	27.5	

<표 3-4-1> 북·미수교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모름	유의도
전 체		11.5	32.6	35.0	13.0	3.5	4.4	
성 별	남 자	14.6	36.3	30.5	12.7	3.7	2.2	X ² = 34.206 p = .0000
	여 자	8.5	29.0	39.3	13.3	3.3	6.6	
연 령	20대	9.7	27.2	41.7	14.2	3.9	3.3	X ² = 34.139 p = .0252
	30대	13.9	34.8	32.1	12.4	3.0	3.6	
	40대	12.6	37.4	31.1	10.4	5.4	3.2	
	50대	10.5	35.4	32.5	12.7	2.1	6.8	
	60세 이상	8.8	23.8	37.5	18.8	2.5	8.8	
세 대	30세 이하	9.9	27.9	41.3	13.7	4.3	2.9	X ² = 14.750 p = .0114
	30세 이상	12.2	34.7	32.2	12.7	3.1	5.1	
학 령	중졸이하	9.5	28.6	37.1	11.4	1.9	11.4	X ² = 46.337 p = .0000
	고 졸	9.8	32.0	36.1	14.1	4.1	4.0	
	대재이상	15.3	35.8	32.1	12.2	3.4	1.3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12.2	26.6	38.8	12.7	3.0	6.8	X ² = 16.000 p = .3820
	120~199만원	10.4	33.2	34.7	14.6	3.3	3.8	
	200~299만원	11.7	35.3	32.6	11.1	5.1	4.2	
	300만원 이상	13.0	33.9	35.0	13.0	1.7	3.4	
거 주 지	서울/경기	12.0	29.3	36.1	12.9	4.6	5.1	X ² = 52.057 p = .0001
	경 상	8.4	33.1	34.0	16.7	2.3	5.5	
	전 라	20.4	38.7	27.5	9.9	2.1	1.4	
	충 청	9.0	42.6	33.6	9.0	4.1	1.6	
	강 원	7.5	20.0	60.0	5.0	2.5	5.0	

<표 3-4-2> 북·일수교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모름	유의도
전 체		7.3	24.8	33.3	20.2	7.7	6.7	
성 별	남 자	8.8	30.3	31.4	18.1	7.5	3.9	$X^2 = 34.779$ $p = .0000$
	여 자	5.9	19.5	35.2	22.1	7.9	9.3	
연 령	20대	6.3	20.2	37.8	20.5	9.4	5.7	$X^2 = 33.778$ $p = .0276$
	30대	9.7	29.1	28.5	18.2	8.8	5.8	
	40대	7.7	23.9	31.5	24.8	7.7	4.5	
	50대	5.9	26.6	35.4	18.1	5.1	8.9	
	60세 이상	5.0	23.8	33.8	20.0	3.8	13.8	
세 대	30세 이하	6.7	21.2	36.5	20.4	9.9	5.4	$X^2 = 9.768$ $p = .0820$
	30세 이상	7.6	26.5	31.9	20.1	6.7	7.3	
학 력	중졸이하	4.8	22.4	36.7	18.1	2.9	15.2	$X^2 = 55.501$ $p = .0000$
	고 졸	6.5	22.8	32.9	22.7	8.9	6.1	
	대재이상	10.1	29.3	32.1	17.4	8.3	2.8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6.8	22.4	35.9	16.0	8.4	10.5	$X^2 = 25.010$ $p = .0498$
	120~199만원	6.6	23.5	33.0	24.6	6.6	5.8	
	200~299만원	7.2	26.0	33.5	17.1	9.6	6.6	
	300만원 이상	10.2	29.4	30.5	20.3	5.6	4.0	
거 주 지	서울/경기	6.2	23.1	31.7	22.4	9.1	7.5	$X^2 = 54.208$ $p = .0000$
	경 상	6.6	26.5	32.0	20.2	6.6	8.1	
	전 라	17.6	26.1	29.6	17.6	7.0	2.1	
	충 청	4.9	29.5	42.6	14.8	4.9	3.3	
	강 원	.0	15.0	52.5	15.0	7.5	10.0	

<표 3-5>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매우좋은 영향	다소좋은 영향	다소나쁜 영향	매우나쁜 영향	모름	유의도
전 체		17.1	68.4	4.0	1.3	9.3	
성 별	남 자	19.7	66.6	4.7	1.2	7.8	X ² = 9.369 p = .0524
	여 자	14.6	70.2	3.3	1.3	10.7	
연 령	20대	15.1	67.7	4.2	2.1	10.9	X ² = 27.412 p = .0371
	30대	23.6	64.2	3.6	.9	7.6	
	40대	12.6	76.1	2.7	1.4	7.2	
	50대	15.2	70.0	4.2	.8	9.7	
	60세 이상	16.3	62.5	7.5	.0	13.8	
세 대	30세 이하	15.8	67.0	4.6	2.1	10.5	X ² = 5.398 p = .2487
	30세 이상	17.7	69.0	3.7	.8	8.7	
학 력	중졸이하	12.4	71.9	3.3	.5	11.9	X ² = 14.492 p = .0698
	고 졸	16.9	67.1	4.6	1.2	10.3	
	대제이상	19.9	68.7	3.4	1.8	6.2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11.4	70.9	5.9	1.3	10.5	X ² = 13.973 p = .3024
	120~199만원	18.4	66.6	3.5	1.1	10.4	
	200~299만원	19.5	67.7	3.9	1.8	7.2	
	300만원 이상	16.9	71.2	2.8	.6	8.5	
거 주 지	서울/경기	18.0	63.6	4.4	1.5	12.6	X ² = 40.611 p = .0006
	경 상	12.7	74.4	3.5	.9	8.6	
	전 라	21.8	71.1	4.2	.7	2.1	
	충 청	22.1	68.9	4.9	.8	3.3	
	강 원	10.0	72.5	.0	5.0	12.5	

<표 3-6>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남북 직접 대화	북·미 직접 대화	3자대화	4자대화	6자대화	모름	유의도
전 체		69.8	3.8	6.7	6.8	4.9	8.2	
성 별	남 자	69.2	4.4	7.3	7.5	6.4	5.3	X ² = 20.465 p = .0010
	여 자	70.3	3.1	6.1	6.1	3.4	11.0	
연 령	20대	69.2	3.9	6.6	7.6	4.5	8.2	X ² = 16.145 p = .7075
	30대	74.2	3.3	7.3	5.5	5.5	4.2	
	40대	68.0	4.5	6.8	6.8	4.1	9.9	
	50대	65.8	3.4	6.3	8.0	5.1	11.4	
	60세 이상	70.0	3.8	5.0	5.0	6.3	10.0	
세 대	30세 이하	68.6	4.6	7.2	7.2	4.8	7.5	X ² = 1.793 p = .8769
	30세 이상	70.3	3.4	6.4	6.5	5.0	8.5	
학 력	중졸이하	67.1	4.8	4.8	5.7	4.3	13.3	X ² = 33.604 p = .0002
	고 졸	70.2	3.3	7.1	6.8	3.1	9.4	
	대재이상	70.5	3.9	7.0	7.3	8.0	3.4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72.6	3.0	4.2	6.8	3.8	9.7	X ² = 15.201 p = .4370
	120~199만원	68.8	4.2	6.6	5.8	4.6	10.0	
	200~299만원	68.9	3.9	8.7	7.8	6.0	4.8	
	300만원 이상	70.1	3.4	6.2	7.3	5.1	7.9	
거 주 지	서울/경기	62.7	3.3	7.3	9.1	5.3	12.4	X ² = 67.044 p = .0000
	경 상	75.5	5.2	6.3	4.6	4.3	4.0	
	전 라	74.6	4.9	5.6	2.8	7.7	4.2	
	충 청	84.4	.8	5.7	5.7	.8	2.5	
	강 원	55.0	2.5	7.5	10.0	7.5	17.5	

- * 3자회담: 남·북한, 미국
- * 4자회담: 남·북한, 미국, 중국
- * 6자회담: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IV. 대북정책관련 인식

1.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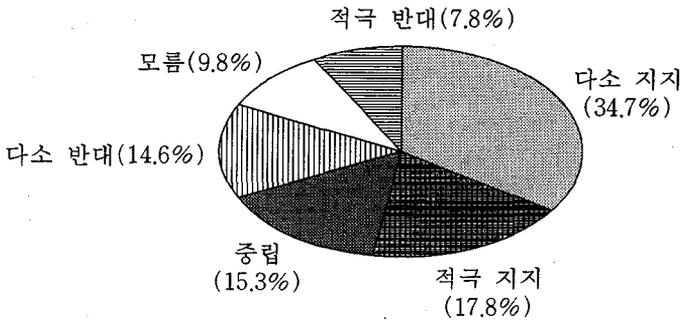
정부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시키지 않는 정책을 채택·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묻기 위해 “귀하는 <서해교전과 같은 정치·군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민간차원의 남북한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다」(17.8%)와 「다소 지지한다」(34.7%)는 응답이 전체의 52.5%로 과반수 이상이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소 반대한다」(14.6%)와 「적극 반대한다」(7.8%)는 부정적 응답은 22.4%였으며,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15.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도의 “잠수함사건과 같은 정치군사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차원의 인적·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유사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부정적 응답이 1998년도의 27.0%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동시에 모르겠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하였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정책에 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

다. 지역별로는 전라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77.8%)과 강원도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30.0%)을 보였다. 이는 1998년 여론조사보다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1998년도 조사시 지지율은 전라도가 63.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경기지역이 50.7%로 가장 낮았다(강원도는 51.5%).

<그림 4-1>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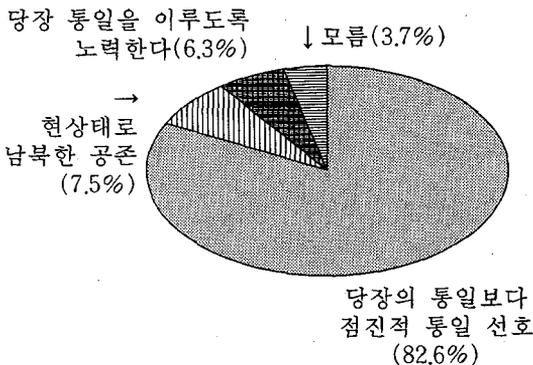
2. 통일에 대한 견해

국민들은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대한 실질적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6%에 달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한의 점진적

통일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 상태로 남북한이 공존하면 된다」고 대답한 비율은 7.5%, 「당장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급작스러운 통일이 초래할 수도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통일정책과도 일치한다. 1998년도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점진적 통일에 대한 지지율은 4.8% 포인트 증가하였고, 조기통일 지지율과 남북공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1.8% 포인트, 4.3% 포인트 감소하였다.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정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사항은 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조기통일을 선호하는 경향(16.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선호율은 1998년 여론조사에 비해 5.6% 포인트 감소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점진적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전라도(90.1%)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경기지역(78.9%)이 가장 낮았다.

<그림 4-2> 통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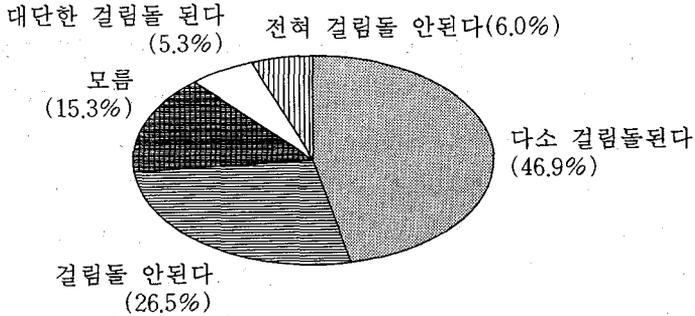
3. 한·미·일 공조체제와 남북관계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체제유지를 위해 이른바 통미·봉남·접일전략 또는 남한을 배제한 대미 접근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한·미·일 이간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모색하였다. 북한은 한·미·일 공조체제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대단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와 「다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5.3%와 46.9%로, 한·미·일 공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2.2%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6.0%와 26.5%로, 긍정적 평가는 32.5%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비율도 15.3%로 상당히 높았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한·미·일 공조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즉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0세 이하 세대에서는 59.0%, 30세 이상에서는 49.1%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력이 높을수록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중졸 이하 41.9%, 고졸 51.3%, 대재이상 59.1%)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한·미·일 공조체제와 남북관계



4.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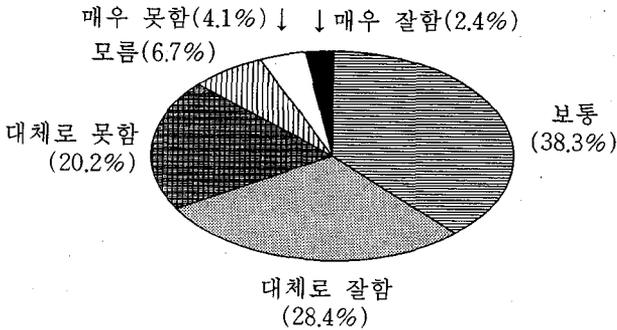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적 지지 또는 절대적 비판 등과 같은 형태로 평가하지 않는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듯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지지와 비판이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원,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3대기조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현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수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0.6%(「매우 잘하고 있다」 2.4%, 「대체로 잘하고 있다」 28.4%)로 나타났으며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24.3%(「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 20.2%, 「매우 못하고 있다」 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998년도 조사(보통이다 40.1%, 잘하고 있다 36.9%, 못한다

26.1%)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미미하지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고 못한다는 응답이 낮아졌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도 및 충청도가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상도와 서울/경기지역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5. 남북관계 개선 우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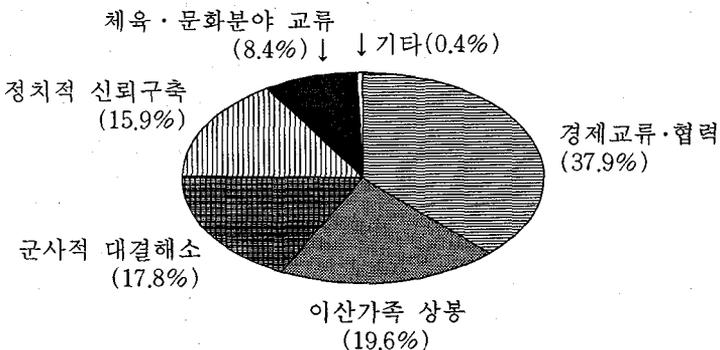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경제교류 및 협력」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산가족 상봉」(19.6%), 「군사적 대결해소」(17.8%), 「정치적 신뢰구축」(15.9%), 「체육·문화분야 교류」(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5년과 1998년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경제교류 및 협력」을 꼽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긴장관계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정치적 분야의 경제교류를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조사결과는 「경제교류 및 협력」(42.3%), 「이산가족 상봉」(20.7%), 「군사적 대결해소」(14.6%), 「정치적 신뢰구축」(13.7%), 「체육·문화분야의 교류」(8.3%)의 순이었으며, 1998년도 조사에서는 「경제교류 및 협력」(38.1%), 「정치적 신뢰구축」(19.7%), 「이산가족 상봉」(18.7%), 「군사적 대결해소」(16.3%), 「체육·문화분야의 교류」(6.8%)의 순이었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여자(34.4%)보다 남자(41.5%)가,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교류 및 협력」을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남자(14.6%)보다 여자(24.4%)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사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제교류 및 협력」은 강원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전라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 남북관계 개선 우선분야



6. 인적교류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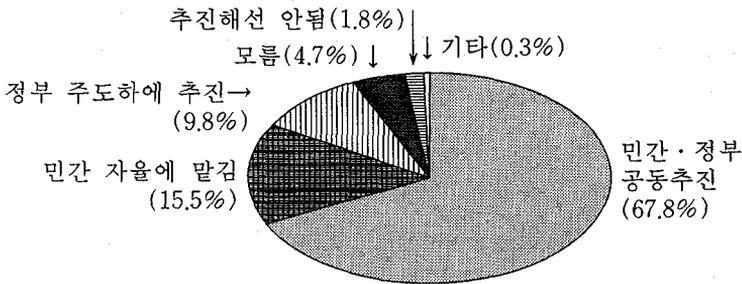
상이한 두 체제를 통합하는 첩경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주민들간의 상호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의 통일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 축적된 인적교류에 힘입어 상호이해가 증진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사실상의 통일을 먼저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한간 인적교류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간 인적교류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67.8%)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5.5%),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여야 한다」(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교류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하였다. 국민 대다수는 남북한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민간과 정부의 공동 추진을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주도보다는 민간 자율에 의한 추진에 우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5년과 1998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1995년과 1998년도에는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에 대한 지지도가 각각 73.8%, 77.2%로 나타났으며, 민간자율 추진은 각각 16.6%, 11.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민간의 자율추진(20대 17.2%, 50대 11.4%)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정부주도 방식(20대 6.6%, 60세 이상 17.5%)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이 높을 수록(중졸 이하 11.9%, 고졸 15.6%, 대재 이상

17.4%) 남북한간 인적교류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거주지에서는 강원도가 민간과 정부의 공동 추진이 45.0%로 가장 낮았으며, 정부주도 방식에 대한 선호는 37.5%로 매우 높았다.

<그림 4-6> 인적교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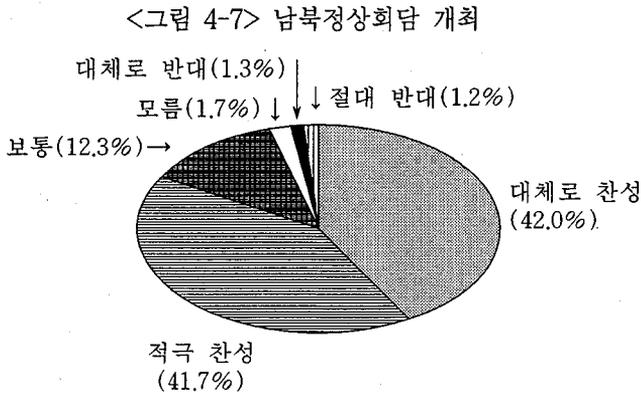
7. 남북정상회담 개최

1994년 합의되었다가 김일성 사망으로 연기된 바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서 커다란 기대를 모아 온 것이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한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찬성(「적극 찬성한다」 41.7%,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42.0%)한다는 의견은 83.7%인 반면, 반대(「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1.3%, 「절대 반대한다」 1.2%)한다는 응답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은 12.3%로 나타났다. 1995년과 1998년도 조사결과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성의견이 각각 80.0%, 82.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성별과 학력에서 뚜렷이 나타나서 남자와 고학력층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성비율은 남자 88.5%, 여자 79.0%였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 79.5%, 고졸 83.4%, 대재 이상 87.9%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전라도의 찬성비율이 97.1%로 거의 전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8.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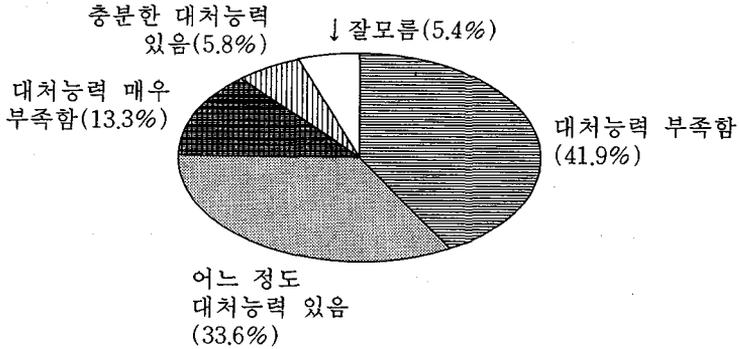
한반도의 안보와 남북한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 주한미군이 커다란 몫을 하고 있음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지속적인 경

제성장과 북한의 상대적 국력쇠퇴를 고려할 때, 과연 우리 국군은 독자적인 힘으로 국가안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단독 대처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처능력이 부족한 편이다」는 응답이 41.9%, 「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13.3%로 다수(55.2%)의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독 대처능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처능력이 있다는 응답은 39.4%(「충분한 대처능력이 있다」 5.8%, 「어느 정도 대처능력이 있다」 33.6%)로 나타났다. 우리의 단독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1.7%로 나타난 1998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단독 대처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는 학력과 거주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우리의 단독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고졸(52.8%)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중졸 이하(58.1%)와 대재 이상(57.5%)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단독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의 정도는 서울/경기지역(57.9%), 경상도(56.0%), 전라도(54.4%)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도(47.5%), 충청도(45.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



9. 남북한의 군비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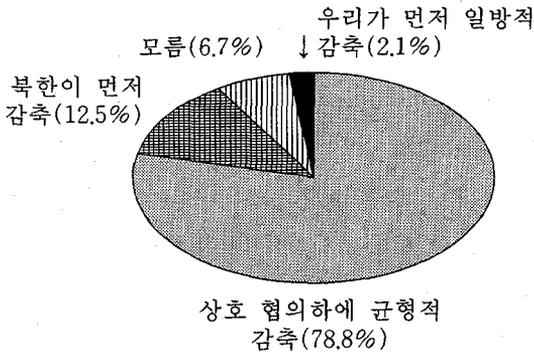
국민들의 상당수는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군비감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군비감축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감축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한이 군비를 감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대다수(78.8%)는 「남북한의 상호협약하에 균형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민들이 비교적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군축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감축한다」는 견해는 2.1%, 「북한이 먼저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에 불과하였다. 우리보다는 북한이 먼저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표출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한 차례 전쟁을 겪은 바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우려한데서 나온 결과로서 군비

감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8년도의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상호협약의하의 균형적 감축에 대해서 여자(75.7%)보다는 남자(81.9%)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중졸 이하 76.2%, 고졸 76.75, 대재 이상 83.4%)이 높을수록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라도(87.3%)가 상호협약의하의 균형적 감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경기지역(73.4%)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그림 4-9> 남북한의 균비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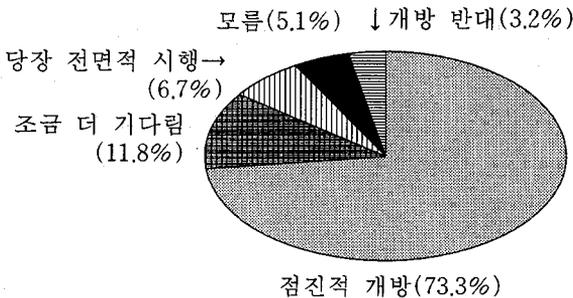
10. 북한 정보 및 방송 개방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책자 및 북한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방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책자 및 북한방송의 개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7%,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73.3%로 긍정적 응답이 80.0%로 나타났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11.8%였으며,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다. 북한 신문·책자 및 방송의 개방에 대하여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점진적인 개방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8년도의 유사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경변수별로 보면 북한 신문·책자 및 방송 개방에 대해 여자보다는 남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북한 정보 개방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강원도가 개방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림 4-10> 북한 정보 및 방송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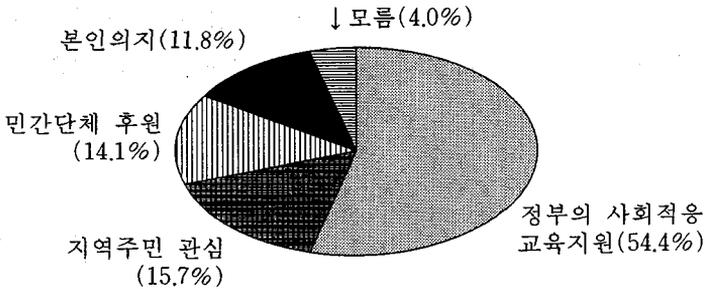
11. 탈북주민의 정착문제

탈북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탈북 주민에 대한 처우 및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탈북 주민의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의 사회적응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15.7%), 「민간단체 후원」(14.1%), 「본인의 의지」(11.8%)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탈북주민 정착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8년도 조사결과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경변수별로 보면, 30세 이하(49.6%) 세대보다 30세 이상(56.6%) 세대에서 정부의 사회적응교육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중졸 이하 50.5%, 고졸 52.8%, 대재 이상 59.1%)이 높을수록 정부의 지원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탈북 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라도(61.3%)와 강원도(60.0%)는 높게 평가한 반면 서울/경기지역(50.3%)과 충청도(51.6%)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4-11> 탈북주민 정착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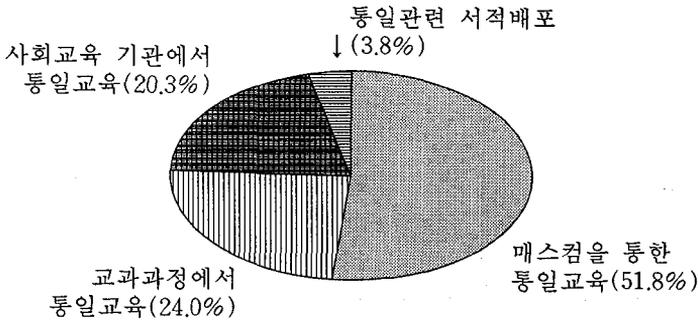
12. 통일교육의 방법

최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법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일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통일관련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의 51.8%가 「매스컴을 통한 통일교육」을 효과적이라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24.0%),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20.3%), 「통일관련 서적 배포」(3.8%)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통일교육을 단순히 학교교육이 아니라 평생동안의 사회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통일관련 서적을 통한 통일교육을 지적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국민들이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통일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매스컴을 통한 통일교육을 효과적이라고 본

응답자가 과반수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을 단순히 학교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범사회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일교육의 매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2> 통일교육의 방법



<표 4-1> 남북한 교류·협력정책

		적극 지지	다소 지지	중립	다소 반대	적극 반대	모름	유의도
전 체		17.8	34.7	15.3	14.6	7.8	9.8	
성 별	남 자	22.4	35.4	12.7	14.7	8.6	6.1	$X^2 = 36.799$ $p = .0000$
	여 자	13.3	33.9	17.9	14.4	7.0	13.4	
연 령	20대	16.9	32.9	19.3	14.2	6.3	10.3	$X^2 = 49.192$ $p = .0002$
	30대	21.8	37.6	10.6	14.5	9.4	6.1	
	40대	22.1	30.2	16.2	14.9	9.5	7.2	
	50대	13.1	36.7	13.1	15.6	7.2	14.3	
	60세 이상	6.3	36.3	22.5	12.5	5.0	17.5	
세 대	30세 이하	16.4	33.8	18.2	15.0	6.7	9.9	$X^2 = 4.636$ $p = .4618$
	30세 이상	18.4	35.1	14.0	14.4	8.3	9.8	
학 력	중졸이하	11.4	31.9	18.1	15.7	4.8	18.1	$X^2 = 41.150$ $p = .0000$
	고 졸	17.1	33.8	16.6	14.1	8.8	9.8	
	대재이상	22.3	37.6	11.9	14.8	8.0	5.4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15.6	33.8	16.5	14.8	5.5	13.9	$X^2 = 18.151$ $p = .2547$
	120~199만원	16.2	33.4	15.5	14.8	9.3	10.8	
	200~299만원	18.9	35.6	15.0	15.0	8.7	6.9	
	300만원 이상	22.6	37.3	14.1	13.0	5.6	7.3	
거 주 지	서울/경기	17.3	32.6	16.4	14.2	8.6	10.9	$X^2 = 70.029$ $p = .0000$
	경 상	14.7	36.3	17.0	18.2	6.6	7.2	
	전 라	30.3	47.2	5.6	7.7	3.5	5.6	
	충 청	13.9	32.0	15.6	14.8	9.0	14.8	
	강 원	17.5	12.5	20.0	12.5	20.0	17.5	

<표 4-2> 통일에 대한 견해

		당장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함	당장의 통일보다 점진적 통일 선호	현상태로 남북한 공존	모름	유의도
전 체		6.3	82.6	7.5	3.7	
성 별	남 자	5.4	85.3	6.4	2.9	$X^2 = 5.959$ $p = .1136$
	여 자	7.0	80.0	8.5	4.4	
연 령	20대	4.8	83.4	6.9	4.8	$X^2 = 24.402$ $p = .0179$
	30대	5.5	85.8	6.4	2.4	
	40대	6.3	78.8	9.9	5.0	
	50대	5.9	82.7	8.9	2.5	
	60세 이상	16.3	76.3	3.8	3.8	
세 대	30세 이하	4.6	84.2	6.7	4.6	$X^2 = 4.278$ $p = .2329$
	30세 이상	7.0	81.9	7.9	3.3	
학 력	중졸이하	11.0	74.8	10.0	4.3	$X^2 = 24.089$ $p = .0005$
	고 졸	5.5	81.5	8.6	4.5	
	대재이상	4.9	88.6	4.4	2.1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8.4	81.4	6.8	3.4	$X^2 = 13.841$ $p = .1280$
	120~199만원	6.4	81.9	6.2	5.5	
	200~299만원	5.4	82.9	9.3	2.4	
	300만원 이상	4.5	85.3	8.5	1.7	
거 주 지	서울/경기	6.7	78.9	7.8	6.6	$X^2 = 34.012$ $p = .0006$
	경 상	6.1	84.7	8.4	.9	
	전 라	4.9	90.1	4.2	.7	
	충 청	7.4	84.4	7.4	.8	
	강 원	2.5	82.5	7.5	7.5	

<표 4-3> 한·미·일 공조체제와 남북관계

		대단한 걸림들 된다	다소 걸림들 된다	걸림들 안된다	전혀 걸림들 안된다	모름	유의도
전 체		5.3	46.9	26.5	6.0	15.3	
성 별	남 자	5.6	45.1	29.5	8.1	11.7	$X^2 = 23.853$ $p = .0000$
	여 자	4.9	48.7	23.6	3.9	18.9	
연 령	20대	7.3	52.3	22.1	5.1	13.3	$X^2 = 42.824$ $p = .0003$
	30대	6.1	49.1	26.1	5.5	13.3	
	40대	3.6	50.9	27.9	4.5	13.1	
	50대	3.8	38.0	32.1	7.2	19.0	
	60세 이상	2.5	31.3	26.3	12.5	27.5	
세 대	30세 이하	7.0	52.0	21.7	5.4	13.9	$X^2 = 11.771$ $p = .0191$
	30세 이상	4.5	44.6	28.7	6.3	16.0	
학 력	중졸이하	2.4	39.5	25.7	6.7	25.7	$X^2 = 40.479$ $p = .0000$
	고 졸	5.8	45.5	25.7	6.8	16.2	
	대재이상	6.0	53.1	28.2	4.4	8.3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3.4	43.9	24.1	8.0	20.7	$X^2 = 25.619$ $p = .0121$
	120~199만원	5.8	45.6	27.2	5.3	16.2	
	200~299만원	5.7	52.1	24.9	7.5	9.9	
	300만원 이상	5.6	44.6	31.1	2.3	16.4	
거 주 지	서울/경기	5.1	44.4	25.3	7.7	17.5	$X^2 = 20.434$ $p = .2013$
	경 상	5.8	51.9	24.8	4.3	13.3	
	전 라	4.9	46.5	29.6	7.0	12.0	
	충 청	5.7	47.5	31.1	3.3	12.3	
	강 원	2.5	37.5	32.5	2.5	25.0	

<표 4-4>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매우 잘함	대체로 잘함	보통	대체로 못함	매우 못함	모름	유의도
전 체		2.4	28.4	38.3	20.2	4.1	6.7	
성 별	남 자	2.9	29.0	39.8	18.1	4.6	5.6	$X^2 = 6.997$ $p = .2208$
	여 자	2.0	27.9	36.7	22.1	3.6	7.7	
연 령	20대	.3	22.4	41.1	24.5	5.4	6.3	$X^2 = 54.881$ $p = .0000$
	30대	1.2	26.7	41.2	21.2	3.3	6.4	
	40대	3.2	31.1	35.1	18.9	5.9	5.9	
	50대	6.3	32.9	35.4	13.9	3.0	8.4	
	60세 이상	2.5	40.0	31.3	20.0	.0	6.3	
세 대	30세 이하	.3	22.8	39.9	26.0	5.4	5.6	$X^2 = 28.968$ $p = .0000$
	30세 이상	3.4	31.0	37.5	17.5	3.5	7.1	
학 력	중졸이하	5.2	36.2	32.9	17.1	1.4	7.1	$X^2 = 24.971$ $p = .0054$
	고 졸	2.2	27.6	37.9	20.2	4.8	7.3	
	대재이상	1.3	25.4	41.7	21.8	4.4	5.4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2.1	28.3	36.3	19.8	4.2	9.3	$X^2 = 7.321$ $p = .9481$
	120~199만원	2.0	28.5	39.2	21.5	3.3	5.5	
	200~299만원	3.3	29.0	37.7	18.9	4.8	6.3	
	300만원 이상	2.3	27.1	39.5	19.8	4.5	6.8	
거 주 지	서울/경기	2.2	24.6	38.3	21.9	4.2	8.9	$X^2 = 79.564$ $p = .0000$
	경 상	1.4	25.1	39.2	24.5	4.3	5.5	
	전 라	7.7	46.5	29.6	11.3	1.4	3.5	
	충 청	.8	30.3	49.2	11.5	5.7	2.5	
	강 원	.0	40.0	27.5	17.5	5.0	10.0	

<표 4-5> 남북관계 개선 우선분야

		정치적 신뢰 구축	군사적 대결해소	경제교류· 협력	체육· 문화분야 교류	이산 가족 상봉	기 타	유의도
전 체		15.9	17.8	37.9	8.4	19.6	4	
성 별	남 자	16.3	18.3	41.5	9.3	14.6	.0	$X^2 = 25.104$ $p = .0001$
	여 자	15.6	17.2	34.4	7.5	24.4	.8	
연 령	20대	14.5	18.7	42.0	9.7	14.8	.3	$X^2 = 41.954$ $p = .0028$
	30대	19.1	15.2	40.3	7.3	17.9	.3	
	40대	15.8	18.9	41.9	5.9	17.1	.5	
	50대	13.5	19.0	30.0	11.0	25.7	.8	
	60세 이상	16.3	17.5	23.8	7.5	35.0	.0	
세 대	30세 이하	15.5	17.4	42.1	9.1	15.3	.5	$X^2 = 8.179$ $p = .1466$
	30세 이상	16.1	17.9	36.0	8.1	21.5	.4	
학 력	중졸이하	14.8	18.1	24.3	8.1	34.3	.5	$X^2 = 51.270$ $p = .0000$
	고 졸	15.1	19.4	37.9	9.1	18.2	.3	
	대재이상	17.9	15.0	45.3	7.5	13.7	.5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19.0	14.3	34.6	6.8	24.9	.4	$X^2 = 20.040$ $p = .1703$
	120~199만원	12.6	18.6	38.7	8.6	21.0	.4	
	200~299만원	18.6	19.8	37.1	9.6	14.7	.3	
	300만원 이상	15.3	16.4	41.8	7.9	18.1	.6	
거 주 지	서울/경기	16.2	16.6	37.2	10.7	18.9	.4	$X^2 = 39.599$ $p = .0056$
	경 상	19.0	18.2	35.7	5.8	20.7	.6	
	전 라	7.0	12.0	44.4	10.6	25.4	.7	
	충 청	16.4	26.2	36.9	4.1	16.4	.0	
	강 원	15.0	25.0	47.5	5.0	7.5	.0	

<표 4-6> 인적교류추진방안

		민간 자율 에 맡김	민간-정부 공동추진	정부 주도하 에 추진	인적교류 추진 해선 안됨	모름	기타	유의도
전 체		15.5	67.8	9.8	1.8	4.7	.3	
성 별	남 자	16.4	66.9	11.4	2.0	3.2	.0	$X^2 = 12.858$ $p = .0247$
	여 자	14.6	68.7	8.4	1.6	6.1	.7	
연 령	20대	17.2	69.5	6.6	3.0	3.3	.3	$X^2 = 49.878$ $p = .0002$
	30대	18.2	68.2	8.5	1.8	3.0	.3	
	40대	14.4	72.1	9.0	.9	3.6	.0	
	50대	11.4	65.0	14.3	1.7	6.8	.8	
	60세 이상	12.5	56.3	17.5	.0	13.8	.0	
세 대	30세 이하	17.2	70.0	6.7	2.9	2.9	.3	$X^2 = 13.886$ $p = .0163$
	30세 이상	14.8	66.9	11.2	1.3	5.4	.4	
학 력	중졸이하	11.9	65.7	11.4	1.0	9.0	1.0	$X^2 = 25.649$ $p = .0042$
	고 졸	15.6	66.7	10.4	2.0	5.0	.3	
	대제이상	17.4	70.7	8.0	2.1	1.8	.0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17.7	64.6	9.7	1.7	6.3	.0	$X^2 = 25.494$ $p = .0436$
	120~199만원	13.9	67.0	13.3	1.3	4.2	.2	
	200~299만원	14.1	70.4	6.6	3.3	5.1	.6	
	300만원 이상	19.2	69.5	7.3	.6	2.8	.6	
거 주 지	서울/경기	15.8	67.0	8.9	2.7	5.1	.4	$X^2 = 51.210$ $p = .0001$
	경 상	17.6	66.9	8.9	1.4	4.9	.3	
	전 라	12.0	77.5	8.5	.0	2.1	.0	
	충 청	13.9	70.5	9.0	1.6	4.1	.8	
	강 원	10.0	45.0	37.5	.0	7.5	.0	

<표 4-7> 남북정상회담 개최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절대 반대	모름	유의도
전 체		41.7	42.0	12.3	1.3	1.2	1.7	
성 별	남 자	48.3	40.2	8.0	1.5	1.5	.5	X ² = 41.915 p = .0000
	여 자	35.2	43.8	16.4	1.0	.8	2.8	
연 령	20대	31.7	48.9	14.5	1.2	1.2	2.4	X ² = 47.933 p = .0004
	30대	50.3	34.5	11.8	.9	1.2	1.2	
	40대	40.1	45.0	12.2	.9	.9	.9	
	50대	44.3	40.9	11.0	.4	1.7	1.7	
	60세 이상	43.8	38.8	8.8	6.3	.0	2.5	
세 대	30세 이하	33.0	48.3	13.9	1.1	1.3	2.4	X ² = 18.205 p = .0027
	30세 이상	45.6	39.2	11.5	1.3	1.1	1.3	
학 력	중졸이하	41.9	37.6	15.2	2.4	1.0	1.9	X ² = 21.084 p = .0205
	고 졸	38.9	43.5	13.7	1.0	.7	2.2	
	대재이상	45.9	42.0	8.3	1.0	2.1	.8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41.4	45.1	10.1	1.3	.4	1.7	X ² = 14.567 p = .4830
	120~199만원	44.5	38.1	12.2	1.8	1.1	2.4	
	200~299만원	38.6	43.7	13.5	1.2	1.8	1.2	
	300만원 이상	40.7	44.6	13.0	.0	1.1	.6	
거 주 지	서울/경기	37.3	42.3	14.8	1.1	2.2	2.4	X ² = 63.397 p = .0000
	경 상	38.3	46.1	12.4	1.4	.6	1.2	
	전 라	66.9	28.2	2.8	.7	.0	1.4	
	충 청	42.6	44.3	10.7	2.5	.0	.0	
	강 원	37.5	45.0	15.0	.0	.0	2.5	

<표 4-8>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

		충분한 대처능력 있음	어느정도 대처능력 있음	대처능력 부족한편 임	대처능 력 매우 부족함	잘모름	유의도
전 체		5.8	33.6	41.9	13.3	5.4	
성 별	남 자	5.9	33.6	41.7	14.9	3.9	$X^2 = 7.199$ $p = .1257$
	여 자	5.6	33.6	42.1	11.8	6.9	
연 령	20대	6.3	28.7	45.3	13.3	6.3	$X^2 = 19.463$ $p = .2453$
	30대	7.3	38.5	37.9	12.7	3.6	
	40대	3.2	32.0	45.9	13.5	5.4	
	50대	4.2	33.8	41.8	13.5	6.8	
	60세 이상	8.8	37.5	33.8	15.0	5.0	
세 대	30세 이하	7.0	29.5	44.0	13.7	5.9	$X^2 = 4.923$ $p = .2952$
	30세 이상	5.2	35.4	41.0	13.2	5.2	
학 력	중졸이하	5.2	30.5	40.0	18.1	6.2	$X^2 = 18.149$ $p = .0201$
	고 졸	5.8	34.4	42.4	10.4	7.0	
	대제이상	6.0	33.9	42.2	15.3	2.6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5.9	30.4	40.1	15.6	8.0	$X^2 = 16.133$ $p = .1851$
	120~199만원	6.2	33.4	40.5	14.2	5.8	
	200~299만원	4.5	37.1	45.2	9.3	3.9	
	300만원 이상	6.8	31.6	41.8	15.8	4.0	
거 주 지	서울/경기	4.2	30.2	42.4	15.5	7.7	$X^2 = 44.642$ $p = .0001$
	경 상	6.6	35.4	45.0	11.0	2.0	
	전 라	9.2	33.8	34.5	19.7	2.8	
	충 청	5.7	41.8	38.5	6.6	7.4	
	강 원	7.5	37.5	45.0	2.5	7.5	

<표 4-9> 남북한 군비감축

		우리가 먼저 일방적 감축	상호 협약하에 균형적 감축	북한이 먼저 감축	모름	유의도
전 체		2.1	78.8	12.5	6.7	
성 별	남 자	1.7	81.9	12.0	4.4	$X^2 = 11.363$ $p = .0099$
	여 자	2.5	75.7	13.0	8.9	
연 령	20대	1.8	75.8	13.0	9.4	$X^2 = 15.717$ $p = .2045$
	30대	2.1	81.8	10.0	6.1	
	40대	2.7	81.5	12.2	3.6	
	50대	2.5	77.6	14.3	5.5	
	60세 이상	.0	73.8	16.3	10.0	
세 대	30세 이하	1.9	76.4	12.6	9.1	$X^2 = 5.360$ $p = .1472$
	30세 이상	2.2	79.8	12.5	5.6	
학 력	중졸이하	1.9	76.2	14.3	7.6	$X^2 = 14.892$ $p = .0211$
	고 졸	1.7	76.7	13.2	8.4	
	대재이상	2.8	83.4	10.4	3.4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3.0	78.5	11.0	7.6	$X^2 = 15.362$ $p = .0814$
	120~199만원	2.9	75.7	15.5	6.0	
	200~299만원	.9	79.6	11.4	8.1	
	300만원 이상	1.1	85.3	9.0	4.5	
거 주 지	서울/경기	2.2	73.4	14.4	10.0	$X^2 = 28.613$ $p = .0044$
	경 상	2.3	81.6	11.2	4.9	
	전 라	1.4	87.3	10.6	.7	
	충 청	1.6	85.2	9.8	3.3	
	강 원	2.5	77.5	12.5	7.5	

<표 4-10> 북한 자료 및 방송 개방

		당장 전면적 시행	점진적 개방	조금 더 기다림	개방 반대	모름	유의도
전 체		6.7	73.3	11.8	3.2	5.1	
성 별	남 자	9.0	74.1	10.7	3.2	3.1	$X^2 = 20.004$ $p = .0005$
	여 자	4.4	72.6	12.8	3.1	7.0	
연 령	20대	7.3	74.6	11.2	2.4	4.5	$X^2 = 24.281$ $p = .0835$
	30대	9.1	76.1	8.8	2.4	3.6	
	40대	5.4	73.0	13.5	3.2	5.0	
	50대	4.6	71.3	13.5	4.6	5.9	
	60세 이상	3.8	63.8	16.3	5.0	11.3	
세 대	30세 이하	7.2	74.8	11.0	2.1	4.8	$X^2 = 2.544$ $p = .6367$
	30세 이상	6.4	72.7	12.1	3.6	5.2	
학 력	중졸이하	2.9	66.7	15.2	5.7	9.5	$X^2 = 35.161$ $p = .0000$
	고 졸	6.8	72.7	11.8	3.3	5.5	
	대제이상	8.5	78.0	9.8	1.6	2.1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6.8	73.0	11.0	3.4	5.9	$X^2 = 5.026$ $p = .9570$
	120~199만원	6.2	72.8	12.6	3.1	5.3	
	200~299만원	7.8	72.2	12.0	3.9	4.2	
	300만원 이상	5.6	77.4	10.2	1.7	5.1	
거 주 지	서울/경기	7.5	73.0	10.2	3.8	5.5	$X^2 = 56.524$ $p = .0000$
	경 상	5.8	74.9	13.3	1.2	4.9	
	전 라	9.9	75.4	11.3	.7	2.8	
	충 청	3.3	75.4	13.9	4.1	3.3	
	강 원	2.5	50.0	15.0	17.5	15.0	

<표 4-11> 탈북주민 정착 문제

		정부의 사회적응 교육지원	민간단 체 후원	지역주 민 관심	본인의지	모름	유의도
전 체		54.4	14.1	15.7	11.8	4.0	
성 별	남 자	53.6	16.6	15.9	11.0	2.9	X ² = 9.755 p = .0447
	여 자	55.2	11.6	15.4	12.6	5.1	
연 령	20대	50.8	16.9	22.4	7.6	2.4	X ² = 56.619 p = .0000
	30대	53.0	14.2	17.6	12.1	3.0	
	40대	61.7	13.5	7.2	14.9	2.7	
	50대	54.4	12.7	11.8	14.8	6.3	
	60세 이상	55.0	7.5	15.0	11.3	11.3	
세 대	30세 이하	49.6	16.9	22.5	8.3	2.7	X ² = 29.592 p = .0000
	30세 이상	56.6	12.8	12.6	13.4	4.6	
학 력	중졸이하	50.5	14.8	11.4	13.8	9.5	X ² = 32.672 p = .0000
	고 졸	52.8	14.2	16.4	12.6	4.0	
	대재이상	59.1	13.5	16.8	9.6	1.0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54.0	16.0	14.3	10.1	5.5	X ² = 9.791 p = .6342
	120~199만원	53.8	12.2	17.0	13.5	3.5	
	200~299만원	55.4	14.7	14.4	12.6	3.0	
	300만원 이상	54.8	15.3	16.4	8.5	5.1	
거 주 지	서울/경기	50.3	14.8	17.3	12.9	4.7	X ² = 36.347 p = .0025
	경 상	58.5	11.5	15.6	10.1	4.3	
	전 라	61.3	11.3	12.7	13.4	1.4	
	충 청	51.6	24.6	10.7	12.3	.8	
	강 원	60.0	5.0	20.0	5.0	10.0	

<표 4-12> 통일교육의 방법

		교과 과정에서 통일교육	매스컴을 통한 통일교육	사회교육 기관에서 통일교육	통일관련 서적배포	유의도
전 체		24.0	51.8	20.3	3.8	
성 별	남 자	22.7	51.9	21.5	3.9	$X^2 = 1.626$ $p = .6533$
	여 자	25.2	51.8	19.2	3.8	
연 령	20대	23.9	52.6	20.2	3.3	$X^2 = 10.386$ $p = .5821$
	30대	20.6	53.9	20.9	4.5	
	40대	23.4	52.3	21.2	3.2	
	50대	26.6	47.3	21.5	4.6	
	60세 이상	32.5	52.5	12.5	2.5	
세 대	30세 이하	23.6	51.7	20.9	3.8	$X^2 = .136$ $p = .9871$
	30세 이상	24.2	51.9	20.1	3.9	
학 력	중졸이하	28.1	54.3	13.8	3.8	$X^2 = 20.107$ $p = .0026$
	고 졸	21.9	49.8	25.2	3.1	
	대재이상	25.1	53.6	16.3	4.9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21.9	53.6	21.1	3.4	$X^2 = 12.086$ $p = .2084$
	120~199만원	21.0	54.4	20.6	4.0	
	200~299만원	27.2	49.7	18.0	5.1	
	300만원 이상	28.2	46.9	23.2	1.7	
거 주 지	서울/경기	27.0	51.0	17.5	4.6	$X^2 = 48.870$ $p = .0000$
	경 상	20.7	53.3	23.1	2.9	
	전 라	30.3	51.4	13.4	4.9	
	충 청	8.2	54.1	36.1	1.6	
	강 원	37.5	45.0	12.5	5.0	

V.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1. 북한경제의 바닥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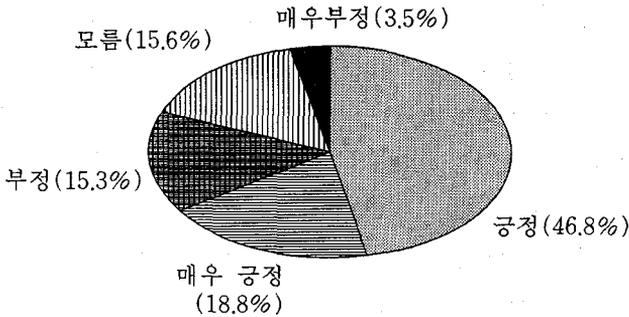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경제후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으로 산업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식량난, 생필품 난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졌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회생의 조짐이 보인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귀하는 <최근 북한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북한경제의 회생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견해에 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18.8%,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46.8%로 나타나 찬성하는 비율이 65.6%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민들 다수는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15.3%,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3.5%로 이 견해를 부정하는 응답은 18.8%에 불과하였다. 한편 「모르겠다」는 응답도 15.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수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사이에는 북한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별로는 충청도에서 찬성하는 응답(74.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36.9%)와 「그렇게 생각한다」(37.7%)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와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북한경제의 바다탈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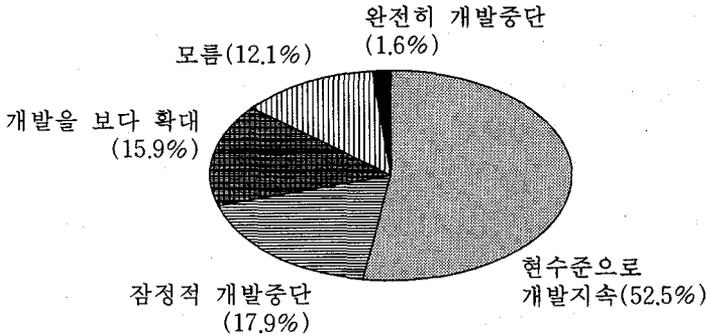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발사 이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문제가 한반도문제의 중요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북한은 미사일개발문제를 '자주권'의 문제로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 대북 '압살정책'을 중단하고, 경제제재를 완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세계적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은 1999년 9월 베를린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추가 완화, 양자

간 고위급회담 개최,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유보 등에 합의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미·북 베를린합의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추가 완화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미국과 북한의 베를린합의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과반수가 조금 넘는 52.5%의 응답자가 「현 수준의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으며, 「개발을 보다 확대할 것이다」라고 본 응답자도 15.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17.9%는 북한이 「잠정적으로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반면에 북한이 「완전히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극히 미미하였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여성 16.7%, 남성 7.3%로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음)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 및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대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뚜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40대에서 북한이 잠정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본 비율(24.3%)이 다른 연령층의 비율(15~17% 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개발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본 응답자중에는 20대가 18.7%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차 낮아져 60세 이상에서는 11.3%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현수준의 개발지속과 잠정적인 개발 중단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5-2> 북한의 미사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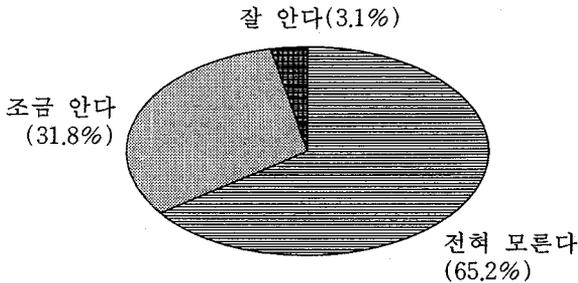
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과 추진속도

정부는 1999년 1월, 제1차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3대 기본목표의 하나로서 한반도 냉전종식을 제시하고, 5월 김대중 대통령의 CNN 위성방송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귀하는 현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5.2%로 국민들의 2/3 정도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반면 「잘 알고 있는 편이다」와 「조금 알고 있는 편이다」는 각각 3.1%, 31.8%로 나타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전혀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74.8%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82.9%, 고졸 65.9%, 대재이상 55.4%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에서 12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71.7%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57.1%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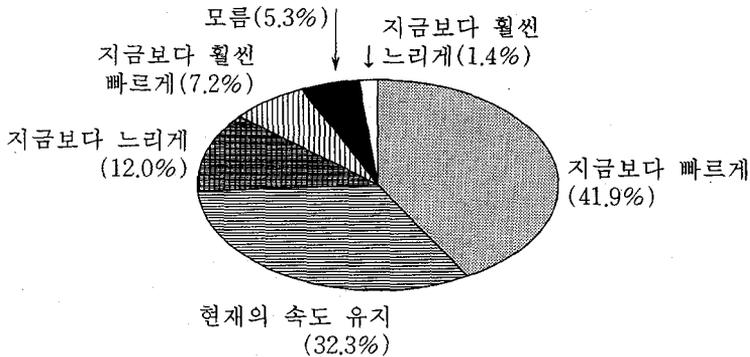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하여 알고 있다(「조금 알고 있는 편이다」와 「잘 알고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분(418명)들에게 “귀하는 현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방안)의 추진속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2%, 「지금보다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9%로서 응답자의 49.1%가 현재보다 빠르게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그리고 「현재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3%를 차지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13.4% 만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속도가 느리게(「지금보다 느리게 추진되어야 한다」 12.0%,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추진되어야 한다」 1.4%)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비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지도는 낮았지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보다 빨리 추진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림 5-3-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의 추진속도



4.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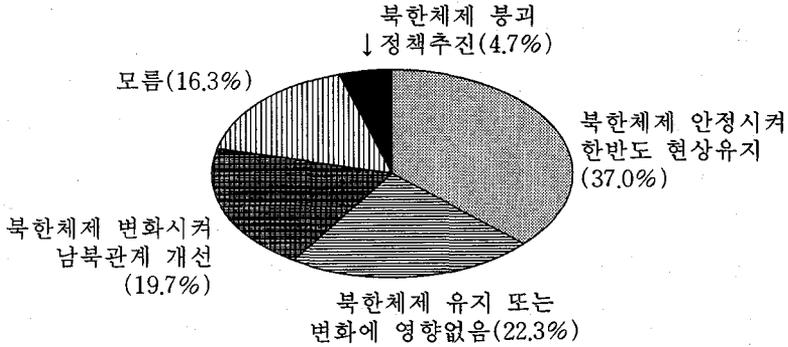
“귀하는 주변 4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북한체제를 안정화시켜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가 3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유지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2.3%), 「북한체제

를 변화시켜 남북관계가 개선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9.7%), 「모르겠다」(16.3%),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지향성과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답자의 59.3%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고착화하거나 한반도의 현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19.7% 만이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낮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국이 대북 고립압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변수별로 볼 때, 여자보다 남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을 현상유지정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르겠다」는 응답은 남자보다 여자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충청도가 주변국의 한반도정책을 현상유지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는 비율(46.7%)이 가장 높았다.

<그림 5-4>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



5. 금강산관광의 통일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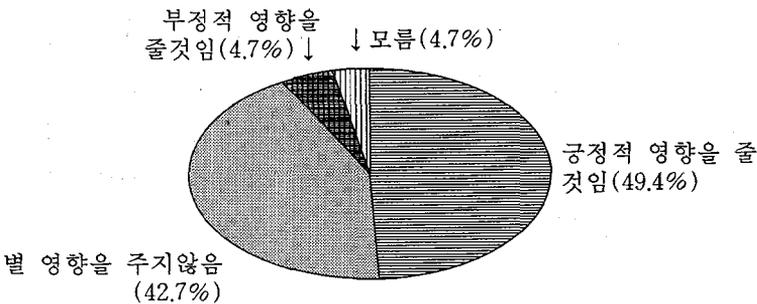
1998년 말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9년 들어와서는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최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금강산 관광이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이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한편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도 42.7%에 달하여 금강산관광이 통일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견해가 매우 높았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 국민들은 적어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우세한 가운

데 무관하다는 입장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도 여론조사에서는 “귀하는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유사한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 영향 55.2%, 부정적 영향 8.9%, 별 영향이 없음 31.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 영향이 다소 줄어든 것은 남북관계라는 현실에서 통일이라는 먼 장래의 사건에 미칠 영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볼 때, 금강산 관광이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는 여자(54.1%)가 남자(4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이 비교적 현실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여성들은 보다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도가 가장 낮았다.

<그림 5-5> 금강산관광의 통일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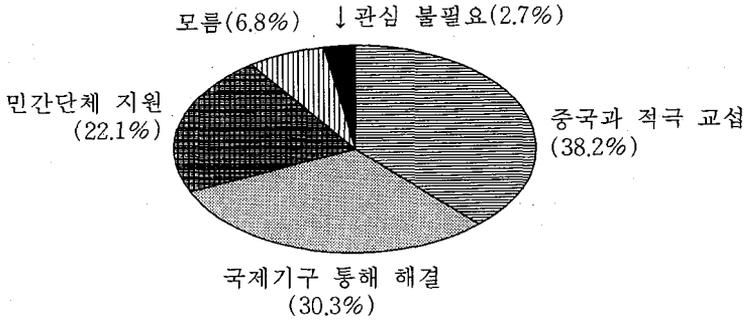
6. 중국내 탈북자 문제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비공식적으로 중국내 탈북자들을 돕고 있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 중 38.2%는 「중국정부와 적극 교섭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30.3%로서 그 뒤를 이었다. 「탈북자를 돕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22.1%나 되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나이, 학력 등 배경변수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탈북자를 돕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대와 30대에서,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60세 이상(8.8%)과 중졸 이하(6.7%)에서 높았다.

<그림 5-6> 중국내 탈북자 문제



<표 5-1> 북한경제의 바다 탈출

		매우긍정	긍정	부정	매우부정	모름	유의도
전 체		18.8	46.8	15.3	3.5	15.6	
성 별	남 자	18.5	46.6	17.1	4.7	13.1	X ² = 12.672 p = .0129
	여 자	19.2	47.0	13.4	2.3	18.0	
연 령	20대	20.2	48.0	14.5	2.1	15.1	X ² = 26.863 p = .0430
	30대	19.1	51.2	12.4	3.6	13.6	
	40대	18.0	45.9	19.8	5.4	10.8	
	50대	18.1	39.7	17.3	3.8	21.1	
	60세 이상	16.3	47.5	11.3	2.5	22.5	
세 대	30세 이하	19.3	49.1	13.9	2.7	15.0	X ² = 2.395 p = .6634
	30세 이상	18.6	45.8	15.8	3.9	15.8	
학 력	중졸이하	19.0	39.0	17.6	3.8	20.5	X ² = 15.791 p = .0454
	고졸	20.0	45.4	15.4	3.1	16.1	
	대재이상	16.8	53.4	13.7	3.9	12.2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13.9	48.5	15.6	4.2	17.7	X ² = 9.725 p = .6400
	120~199만원	20.6	44.9	17.0	2.7	14.8	
	200~299만원	20.1	46.7	14.1	4.2	15.0	
	300만원 이상	18.6	49.7	12.4	3.4	15.8	
거 주 지	서울/경기	18.9	47.9	14.0	4.0	15.1	X ² = 51.434 p = .0000
	경상	13.3	47.0	16.4	2.3	21.0	
	전라	16.9	49.3	21.1	4.2	8.5	
	충청	36.9	37.7	11.5	4.1	9.8	
	강원	17.5	50.0	12.5	2.5	17.5	

<표 5-2> 북한의 미사일 개발

		개발을 보다 확대	현수준의 개발지속	잠정적 개발 중단	완전히 개발 중단	모름	유의도
전 체		15.9	52.5	17.9	1.6	12.1	
성 별	남 자	15.1	56.1	19.8	1.7	7.3	X ² = 27.923 p = .0000
	여 자	16.7	49.0	16.1	1.5	16.7	
연 령	20대	18.7	54.1	16.6	1.2	9.4	X ² = 70.226 p = .0000
	30대	18.5	55.5	17.6	1.2	7.3	
	40대	13.5	54.1	24.3	.9	7.2	
	50대	12.2	47.3	15.2	3.4	21.9	
	60세 이상	11.3	45.0	15.0	1.3	27.5	
세 대	30세 이하	19.8	52.5	16.9	1.1	9.7	X ² = 9.091 p = .0588
	30세 이상	14.1	52.5	18.4	1.8	13.2	
학 력	중졸이하	11.9	44.8	13.8	1.9	27.6	X ² = 65.570 p = .0000
	고 졸	17.2	53.8	17.7	1.0	10.3	
	대재이상	16.1	54.7	20.5	2.3	6.5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12.7	55.3	14.3	1.3	16.5	X ² = 16.074 p = .1878
	120~199만원	18.4	49.8	18.4	1.3	12.2	
	200~299만원	15.0	52.7	20.7	2.4	9.3	
	300만원 이상	15.8	55.4	16.4	1.1	11.3	
거 주 지	서울/경기	14.8	51.2	20.2	2.4	11.5	X ² = 27.267 p = .0386
	경 상	19.6	51.3	13.3	1.4	14.4	
	전 라	15.5	54.9	21.8	.0	7.7	
	충 청	10.7	59.0	18.9	.8	10.7	
	강 원	17.5	52.5	10.0	.0	20.0	

<표 5-3-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잘 안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	유의도
전 체		3.1	31.8	65.2	
성 별	남 자	4.6	40.2	55.3	X ² = 51.803 p = .0000
	여 자	1.6	23.6	74.8	
연 령	20대	2.1	36.9	61.0	X ² = 16.237 p = .0391
	30대	3.9	34.2	61.8	
	40대	4.1	30.6	65.3	
	50대	2.1	24.5	73.4	
	60세 이상	3.8	25.0	71.3	
세 대	30세 이하	2.7	34.9	62.5	X ² = 2.530 p = .2821
	30세 이상	3.3	30.4	66.4	
학 력	중졸이하	1.0	16.2	82.9	X ² = 49.078 p = .0000
	고 졸	3.1	31.0	65.9	
	대재이상	4.1	41.5	54.4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4.2	24.1	71.7	X ² = 17.317 p = .0081
	120~199만원	2.4	29.9	67.7	
	200~299만원	3.6	35.0	61.4	
	300만원 이상	2.3	40.7	57.1	
거 주 지	서울/경기	2.4	32.1	65.6	X ² = 12.584 p = .1269
	경 상	4.6	30.0	65.4	
	전 라	4.2	39.4	56.3	
	충 청	1.6	27.9	70.5	
	강 원	.0	27.5	72.5	

<표 5-3-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의 추진속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보다 빠르게	현재의 속도 유지	지금보다 느리게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모름	유의도
전 체		7.2	41.9	32.3	12.0	1.4	5.3	
성별	남 자	7.6	42.4	33.3	9.8	1.5	5.3	X ² = 3.159 p = .6753
	여 자	6.5	40.9	30.5	15.6	1.3	5.2	
연령	20대	5.4	45.0	33.3	10.1	2.3	3.9	X ² = 27.510 p = .1215
	30대	9.5	49.2	23.8	10.3	2.4	4.8	
	40대	7.8	36.4	29.9	19.5	.0	6.5	
	50대	6.3	33.3	42.9	12.7	.0	4.8	
	60세 이상	4.3	26.1	52.2	4.3	.0	13.0	
세대	30세 이하	7.1	45.7	32.1	9.3	2.1	3.6	X ² = 3.885 p = .5660
	30세 이상	7.2	39.9	32.4	13.3	1.1	6.1	
학력	중졸이하	8.3	27.8	44.4	11.1	.0	8.3	X ² = 6.968 p = .7283
	고 졸	6.8	42.7	31.1	12.6	1.0	5.8	
	대재이상	7.4	43.8	31.3	11.4	2.3	4.0	
가구소득	120만원 미만	9.0	31.3	41.8	10.4	3.0	4.5	X ² = 14.249 p = .5066
	120~199만원	4.8	42.5	33.6	11.6	.7	6.8	
	200~299만원	7.0	45.7	30.2	10.9	2.3	3.9	
	300만원 이상	10.5	43.4	25.0	15.8	.0	5.3	
거주지	서울/경기	5.8	42.9	28.6	14.3	1.1	7.4	X ² = 18.606 p = .5475
	경 상	8.3	44.2	32.5	9.2	1.7	4.2	
	전 라	9.7	38.7	41.9	8.1	.0	1.6	
	충 청	8.3	33.3	36.1	13.9	5.6	2.8	
	강 원	.0	45.5	27.3	18.2	.0	9.1	

<표 5-4>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

		북한체제 변화시켜 남북관계 개선	북한체제 안정시켜 한반도 현상유지	북한체제 유지 또는 변화에 영향없음	북한체제 붕괴 정책추진	모름	유의도
전 체		19.7	37.0	22.3	4.7	16.3	
성 별	남 자	18.6	43.7	21.2	4.9	11.5	X ² = 32.083 p = .0000
	여 자	20.7	30.5	23.4	4.4	21.0	
연 령	20대	16.9	37.5	24.8	5.4	15.4	X ² = 23.079 p = .1116
	30대	18.8	40.6	22.7	3.9	13.9	
	40대	22.1	37.8	23.0	4.1	13.1	
	50대	21.9	31.6	20.3	5.9	20.3	
	60세 이상	21.3	33.8	15.0	2.5	27.5	
세 대	30세 이하	17.7	38.6	22.8	5.6	15.3	X ² = 2.940 p = .5677
	30세 이상	20.6	36.3	22.1	4.2	16.8	
학 력	중졸이하	22.4	28.1	18.1	5.7	25.7	X ² = 40.473 p = .0000
	고 졸	19.4	34.3	24.3	5.0	17.1	
	대재이상	18.7	46.1	21.5	3.6	10.1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24.1	35.0	19.0	3.0	19.0	X ² = 12.191 p = .4304
	120~199만원	17.5	37.2	23.9	5.1	16.4	
	200~299만원	20.7	35.9	24.3	5.1	14.1	
	300만원 이상	17.5	41.2	19.2	5.1	16.9	
거 주 지	서울/경기	17.5	34.2	23.7	6.4	18.2	X ² = 32.663 p = .0081
	경 상	22.2	37.8	20.7	3.7	15.6	
	전 라	27.5	36.6	23.9	2.8	9.2	
	충 청	12.3	46.7	22.1	3.3	15.6	
	강 원	22.5	40.0	12.5	.0	25.0	

<표 5-5> 금강산관광의 통일에 대한 영향

		긍정적 영향을 줄것임	부정적 영향을 줄것임	별영향을 주지않음	모름	유의도
전 체		49.4	4.7	42.7	3.3	
성 별	남 자	44.6	5.6	47.6	2.2	X ² = 18.243 p = .0003
	여 자	54.1	3.8	37.9	4.3	
연 령	20대	45.6	4.5	45.3	4.5	X ² = 18.178 p = .1103
	30대	56.4	3.3	37.9	2.4	
	40대	49.1	5.0	43.2	2.7	
	50대	43.5	5.9	46.4	4.2	
	60세 이상	55.0	6.3	38.8	.0	
세 대	30세 이하	47.5	4.6	44.0	4.0	X ² = 1.641 p = .6499
	30세 이상	50.3	4.7	42.1	2.9	
학 력	중졸이하	49.0	5.2	42.4	3.3	X ² = 6.325 p = .3877
	고 졸	46.5	5.1	44.7	3.6	
	대재이상	54.1	3.6	39.6	2.6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43.5	6.3	46.0	4.2	X ² = 16.252 p = .0618
	120~199만원	48.0	4.4	45.1	2.4	
	200~299만원	50.6	3.3	41.9	4.2	
	300만원 이상	58.8	5.6	33.3	2.3	
거 주 지	서울/경기	49.9	5.1	39.9	5.1	X ² = 35.835 p = .0003
	경 상	49.3	6.1	42.9	1.7	
	전 라	56.3	.7	41.5	1.4	
	충 청	36.1	4.9	58.2	.8	
	강 원	60.0	.0	35.0	5.0	

<표 5-6> 중국내 탈북자 문제

		중국과 적극교섭	국제기구 통해 해결	민간단체 지원	관심 불필요	모름	유의도
전 체		38.2	30.3	22.1	2.7	6.8	
성 별	남 자	40.7	31.4	21.9	2.0	4.1	X ² = 17.145 p = .0018
	여 자	35.7	29.2	22.3	3.3	9.5	
연 령	20대	38.7	26.6	26.9	2.1	5.7	X ² = 35.381 p = .0035
	30대	39.4	30.6	23.9	1.5	4.5	
	40대	39.6	32.9	17.6	2.3	7.7	
	50대	34.2	34.6	18.6	3.4	9.3	
	60세 이상	38.8	23.8	17.5	8.8	11.3	
세 대	30세 이하	38.9	26.5	26.8	2.1	5.6	X ² = 9.705 p = .0456
	30세 이상	37.8	31.9	20.0	2.9	7.4	
학 력	중졸이하	37.6	23.3	19.0	6.7	13.3	X ² = 5.244 p = .0000
	고 졸	37.3	32.1	21.5	1.8	7.3	
	대재이상	39.9	31.1	24.6	1.8	2.6	
가 구 소 득	120만원 미만	40.1	26.2	21.1	3.4	9.3	X ² = 2.359 p = .4172
	120~199만원	36.7	30.5	22.3	3.5	6.9	
	200~299만원	38.0	33.8	21.6	1.8	4.8	
	300만원 이상	39.5	28.2	23.7	1.1	7.3	
거 주 지	서울/경기	37.0	30.4	22.0	3.1	7.5	X ² = 23.338 p = .1049
	경 상	37.5	30.8	20.5	3.5	7.8	
	전 라	46.5	28.9	17.6	2.1	4.9	
	충 청	33.6	32.0	32.0	.0	2.5	
	강 원	45.0	22.5	22.5	.0	10.0	

VI. 요약 및 결론

1. 북한관련 인식

연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관련 보도가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2/3(68.5%) 이상은 북한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낮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과 1998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들은 북한을 부정적 대상(「경계대상」 28.7%, 「적대대상」 8.2%)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긍정적 대상(「협력대상」 32.6%, 「지원대상」 19.3%)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95년과 1998년에 각각 59.6%, 54.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6.9%로 대폭 낮아졌다.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해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65.6%)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28.2%)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1995년도와 1998년도 조사결과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48.2%, 50.2%였다. 이번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의 변화 정도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대다수(74.4%)의 국민들은 북한이 개방(부분적 개방 65.8%, 전면적 개방 7.6%)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98년도 여론조사시 북한 개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51.0%)와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김정일체제에 대한 지지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는 지지(38.4%)가 반대(33.0%)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중립적인 응답이 감소한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다. 국민들의 대다수(76.7%)가 북한 경제난의 원인을 사회주의체제의 모순(53.8%)과 북한의 정책적 한계(22.9%) 등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92.8%(매우 부족 70.7%, 조금 부족 22.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995년도 및 1998년도 조사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제난 등으로 붕괴(37.6%)하기보다는 그럭저럭 생존(46.8%)하거나 발전(9.3%)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향후 북한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과거보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1995년 50.9%, 1998년 45.8%)을 낮게 평가하였다.

국민들은 향후 2~3년 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58.2%)을 하고 있다. 과거(1995년과 1998년) 조사보다 낙관적 전망이 증가한 것은 금강산관광사업, 남북한간 농구경기 교환, 대중문화예술인의 방북과 같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85.1%)의 국민들은 북한이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적화통일정책 불변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 조사(1995년 93.3%, 1998년 88.1%)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북한의 국력이 약화됨에 따라 적화통일의 지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매우 크다 4.9%, 다소 크다

39.3%)는 응답 44.2%보다 가능성이 없다(별로 없다 42.3%, 거의 없다 8.5%)는 응답이 50.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1995년과 1998년 조사에서는 각각 54.8%, 57.7%로 나타나 최근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 그대로 전달(35.3%)과 사실보다 부정적으로 전달(33.9%)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매스컴의 북한관련 보도에 대하여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1998년도 조사보다 사실 그대로 전달은 증가하였고 부정적 전달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정보 전달에 대한 매스컴의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74.6%)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북한실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3%가 북한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50.3%)가 남북한이 실제로 두 개의 나라라는 인식을 가진 반면, 43.8%는 하나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 분단의 실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1998년도 조사와 거의 일치하였다.

2. 통일관련 주변 환경 인식

국민들의 절반 정도(49.7%)는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변 4국 중에서는 미국(26.8%)이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도 조사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국민들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 국민들은 경제성장(44.9%)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적 민주화(23.4%)를 지적하였다. 1995년과 1998년 조사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적한 비율이 각각 36.3%, 51.4%였으며, 정치적 민주화를 지적한 비율은 각각 36.9%, 24.4%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의 IMF 관리체제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반수 이상(58.3%)의 국민들은 향후 20년 이내(20년 이내 28.3%, 10년 이내 27.0%, 5년 이내 3.0%)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통일 예상시기를 10년 이내(누계)로 전망한 비율(1994년 73.8%, 1995년 50.4%, 1998년 33.0%, 1999년 30.0%)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조기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북·미수교에 대해 반대(16.5%)보다는 찬성(44.1%)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북·일수교에 대해서는 찬성(32.1%)이 반대(27.9%)보다 높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1998년 여론조사(북·미수교 51.0%, 북·일수교 40.1%)에 비해 낮아졌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국민들은 우리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현실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절대 다수(85.5%)의 국민들은 우리의 경제회복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98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 대다수(76.8%)는 IMF체제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으로 국민들 대다수(69.8%)는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조사에서도 남북한간의 직접대화 지지도는 71.5%를 차지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

를 유지하는 데 있어 남북 당사자 원칙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유지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거나, 한반도 문제가 지나치게 국제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대북정책관련 인식

국민들은 정치·군사적 사건(1999년의 서해교전, 1998년의 잠수함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52.5%)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도 의 유사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대다수(82.6%)의 국민들은 남북한의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통일에 대한 지지율은 1998년도 조사시 77.8%에 비해 증가하였다. 당장 통일을 바라는 국민은 6.3%에 그쳤다. 국민들은 급작스러운 통일이 초래할 수도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와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다수(52.2%)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는 32.5%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에 대해 국민들은 보통이다 38.3%, 잘한다 30.6%, 못한다 24.3%로 평가하였다. 1998년도 조사(보통이다 40.1%, 잘한다 26.9%, 못한다 26.1%)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대북정책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졌고 못한다는 응답이 낮아졌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은 경제교류 및 협력(37.9%)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산가족 상봉(19.6%), 군

사적 대결해소(17.8%), 정치적 신뢰구축(15.9%), 체육·문화분야 교류(8.4%)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5년과 1998년도 조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경제교류 및 협력이었다. 남북한간 인적 교류 추진에 대해 국민들은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을 선호하였다.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에 대한 지지도는 1995년 73.8%, 1998년 77.2%, 1999년 67.8%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83.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은 1995년(80.0%) 및 1998년(82.9%) 조사에 비해 미미하지만 높았다.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독 대처능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수(55.2%)의 국민들은 우리의 단독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1998년도 조사시의 단독 대처능력 부족(71.7%)에 비해서는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교적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군축관을 가지고 있다. 즉 대다수(78.8%) 국민들은 남북한이 상호협의를하여 균형적으로 군비를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우선 감축(12.5%)이 우리의 일방적 감축(2.1%)보다 높은 것은 군비 감축에 대한 신중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신문·책자 및 방송의 개방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다수(80.0%)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개방(73.3%)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8년도의 유사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매스컴을 통한 통일교육(51.8%)을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은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24.0%)과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20.3%)이 차지하였다. 국민들은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통일교육을 받기를 원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은 정부의 사회적응교육과 지원(54.4%)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탈북주민 정착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이번 결과는 1998년도 조사결과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북한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65.6%(정말 그렇다 18.8%, 그렇다 46.8%)로 나타나 국민들 다수는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향후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민들은 미·북 베를린 합의 및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현수준의 개발 지속 52.5%, 개발 확대 15.9%)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보다 빨리 추진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민들의 2/3 정도(65.2%)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방안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 중 49.1%가 현재보다 빠르게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59.3%는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고착화하거나 한반도의 현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19.7% 만이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고있다. 절반 정도(49.4%)의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이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별 영향을 주

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42.7%로 높게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 국민들은 적어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38.2%)과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30.3%)에 비중을 두고 있다.

5. 종합 결론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관심의 정도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북한실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어들고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대상과 같은 긍정적 대상으로의 인식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변화 정도와 개방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크게 늘어났으며,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생존 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 비록 북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2~3년 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이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의 국력이 약화됨에 따라 적화통일의지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서 드러난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뒷받침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 경제난의 원인을 사회주의체제의 모순과

북한의 정책적 한계 등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 그대로 전달과 사실보다 부정적으로 전달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정보 전달에 대한 매스컴의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이기보다는 실제로 두 개의 나라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변 4국 중에서는 미국이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지적하였다.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조기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약화된 것 나타났다. 북·미수교와 북·일수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으로 국민들은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에 대해 국민들은 지난해보다는 잘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은 경제교류 및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현실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군사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 남북한간 인적교류 추진에 대해 국민들은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을 선호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한의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였다. 한편 국

민들의 다수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독 대처능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단독 대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은 남북한이 상호협약 하에 균형적으로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군축관을 가지고 있다. 북한 신문·책자 및 방송의 개방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탈북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은 정부의 사회적응교육과 지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의 향후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민들은 미·북 베를린 합의 및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보다 빨리 추진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수의 국민들은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고착화하거나 한반도의 현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과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에 비중을 두고 있다.

부 록: 설 문 지

1999년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수렴하여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통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통일문제에 대한 귀하의 평소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통일정책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999년 12월

조사기관 : 통일연구원

* 그리고 설문에 대해 응답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 귀하는 주위사람들과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 1) 자주 한다 2) 가끔 한다
 3) 별로 하지 않는다 4) 거의 하지 않는다

문2.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원대상 2) 협력대상
 3) 경쟁대상 4) 경계대상
 5) 적대대상 6) 모르겠다

문3.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았다 4) 거의 변하지 않았다
 5) 모르겠다

문4. 귀하는 2000년에 접어들면 북한의 개방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2) 부분적(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다
 3) 현상유지될 것이다
 4) 개방이 후퇴할 것이다
 5) 모르겠다

문5.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현재의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1) 적극 지지한다 2) 다소 지지한다
- 3)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4) 다소 반대한다
- 5) 적극 반대한다 6) 모르겠다

문6. 귀하는 북한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회주의 진영 붕괴 2) 자연재해(홍수·가뭄 등)
- 3)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 4) 북한 사회주의 체제 모순
- 5) 김일성부자의 경제정책적 한계
- 6) 북한은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다
- 7) 모르겠다.

문7. 귀하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족하다 2) 조금 부족하다
- 3) 부족하지 않다 4) 충분하다
- 5) 모르겠다

문8. 귀하는 “최근 북한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국내외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 2) 그렇게 생각한다
- 3)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4)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5) 모르겠다

문9. 귀하는 장래에 북한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
- 2)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이다
- 3)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 4) 모르겠다

문10. 귀하는 앞으로 2~3년 내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 2) 다소 진전될 것이다
- 3)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 4)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 5) 모르겠다

문11. 귀하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북한은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
- 2)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여전히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
- 3)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 4) 모르겠다

문12. 귀하는 미국과 북한의 베를린합의 및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개발을 보다 확대할 것이다
- 2) 현 수준의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 3) 잠정적으로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
- 4) 완전히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
- 5) 모르겠다

문13. 귀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 1) 매우 크다
- 2) 다소 크다
- 3) 별로 없다
- 4) 거의 없다
- 5) 모르겠다

문14. 귀하는 남한의 매스컴(신문, 방송, 잡지 등)에 나타나는 북한관련 보도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북한의 상황을 사실보다 부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2) 북한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 3) 북한의 상황을 사실보다 긍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4) 모르겠다

문15. 북한실상에 대하여 귀하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가 양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너무 많다
- 2) 많은 편이다
- 3) 적당하다
- 4) 부족한 편이다
- 5) 너무 부족하다

문16. 귀하는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하나의 나라 2) 두 개의 나라
 3) 모르겠다

다음으로 통일 환경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7. 귀하는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 6) 모르겠다

문18. 귀하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적 민주화 2) 경제성장 3) 지역감정
 4) 빈부격차 5) 노사문제 6) 세대갈등
 7)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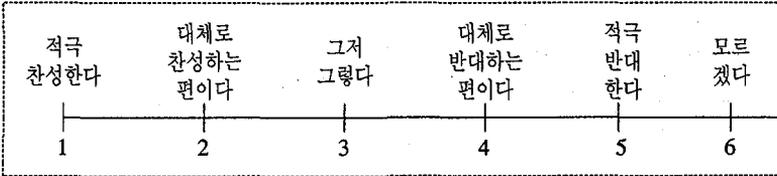
문19.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모르겠다

문20. 귀하는 북한·미국 간의 수교 및 북한·일본 간의 수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빈칸에 적어 주십시오.

1) 북·미 수교 2) 북·일 수교

보기



문21. 귀하는 최근 한국의 경제회복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다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다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모르겠다

문22. 귀하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한과 북한간의 직접대화
- 2)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대화
- 3) 남북한과 미국의 3자대화
- 4)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대화
- 5)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자대화
- 6) 모르겠다

다음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23. 귀하는 “서해교전과 같은 정치·군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민간차원의 남북한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 지지한다 2) 다소 지지한다
 3)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4) 다소 반대한다
 5) 적극 반대한다 6) 모르겠다

문24. 귀하는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당장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3) 현 상태로 남북한이 공존하면 된다
 4) 모르겠다

문25. 귀하는 현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잘 알고 있는 편이다(☞문25-1로)
 2) 조금 알고 있는 편이다(☞문25-1로)
 3) 전혀 알지 못한다(☞다음페이지 문26으로)

문25-1. (문25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만) 귀하는 현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방안)의 추진 속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 2) 지금보다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 3) 현재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4) 지금보다 느리게 추진되어야 한다
- 5)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추진되어야 한다
- 6) 모르겠다

문26. 귀하는 주변 4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남북관계가 개선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북한체제를 안정화시켜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3) 북한체제의 유지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4)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5) 모르겠다

문27. 귀하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단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 2) 다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 3)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4) 전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5) 모르겠다

문28. 귀하는 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
 5) 매우 못하고 있다 6) 모르겠다

문29. 귀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대결해소
 3) 경제교류 및 협력 4) 체육·문화분야의 교류
 5) 이산가족상봉 6) 기타_____

문30. 귀하는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간 인적 교류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2)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4) 인적 교류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5) 모르겠다
 6) 기타_____

문31. 귀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5) 절대 반대한다 6) 모르겠다

문32. 귀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도움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충분한 대처능력이 있다
- 2) 어느 정도 대처능력이 있다
- 3) 대처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 4) 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 5) 잘 모르겠다

문33. 귀하는 남북한이 군비를 감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감축한다
- 2) 남북한 상호협약하에 균형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 3) 북한이 먼저 감축해야 한다
- 4) 모르겠다

문34. 귀하는 금강산 관광이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2)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3)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4) 모르겠다

문35. 귀하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책자 및 북한방송의 개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2)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 3) 조금 더 기다렸다 해야 한다
- 4) 개방해서는 안된다
- 5) 모르겠다

문36. 귀하는 탈북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부의 사회적응교육과 지원
- 2) 민간단체 후원
- 3) 지역주민들의 관심
- 4) 본인의 의지
- 5) 모르겠다

문37. 귀하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중국정부와 적극 교섭해야 한다
- 2)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 3) 탈북자를 돕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4)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 5) 모르겠다

문38. 귀하는 통일관련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
- 2) 매스컴을 통한 통일교육
- 3)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
- 4) 통일관련 서적 배포

다음은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이오니, 빠짐없이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SQ1. 성별

- 1) 남 2) 여

SQ2. 선생님의 연세는 만으로 몇 살이십니까? 만 _____ 세

SQ3.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1) 초등학교 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대학원졸 이상

SQ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기독교2
 2) 민족종교(원불교, 대종교, 천도교 등)
 3) 불교 4) 유교 5) 천주교
 6) 기타_____ 7) 없음

SQ5. 귀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2) 경기 3) 강원 4) 충청
 5) 경상 6) 전라 7) 제주 8) 이북
 9) 기타

SQ6.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 면지역

■ 공무원 및 사회단체

- (11) 고급공무원(4급서기관 이상, 총경 이상)
- (12) 일반공무원(5급사무관 이하, 경정 이하)
- (13) 군인(영관급 이상)
- (14) 군인(위관급, 하사관)
- (15) 기능직 공무원 (무엇: _____)
- (16) 고용직 공무원 (무엇: _____)

■ 기업체 (은행 및 금융업 포함)

- (21) 대기업체 경영주, 중역, 임원(이사급이상)
- (22) 중간관리직 사원(부장, 차장, 과장급)
- (23) 사무직 사원(대리, 계장, 평사원)
- (24) 중소기업 사장 (무엇: _____)

■ 판매·서비스직

- (31) 영세자영업 및 상점주인 (무엇: _____)
- (32) 음식점, 여관, 세탁소 등의 주인 (무엇: _____)
- (33) 복덕방, 부동산 중개인
- (34) 점원
- (35) 서비스직 피고용인
- (36) 수위, 경비원, 청소원
- (37) 외판원
- (38) 행사, 노점상, 파출부
- (39) 기타 판매 서비스직

■ 생산직

- (41)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 (42) 숙련공 (무엇: _____)
- (43) 공장근로자 (무엇: _____)
- (44) 자동차·중장비 운전자
- (45) 막노동, 단순노동
- (46) 가내 수공업 (무엇: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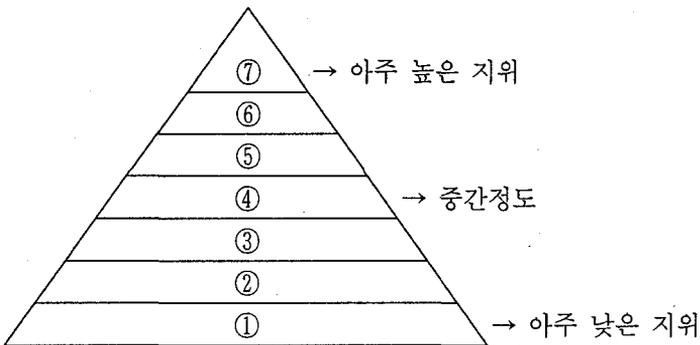
■ 농어민

- (51) 부농(소유경작 6,000평 이상)
- (52) 중농(3,000~6,000평 미만)
- (53) 소농(1,500~3,000평 미만)
- (54) 빈농(1,500평 미만)
- (55) 농업노동자, 품일꾼
- (56) 축산, 낙농업주
- (57) 선주
- (58) 선원, 어부
- (59) 기타 농어업 (무엇: _____)

■ 기타

- (61) 학생 (62) 주부 (63) 무직
(64)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65) 군인(사병), 방위병, 전경
(66) 기타 (무엇: _____)

SQ10.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7개의 층으로 나누다고 할 때, 귀하는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의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채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육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험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동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상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99-16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99-17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박종철	공저	7,000원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저	7,000원
99-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이교덕	공저	5,500원
99-20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용표	저	4,000원
99-2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저	5,000원
99-22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최춘흠	저	4,000원
99-23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최수영·박영호·홍관희·허문영	공저	6,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8 (1999)	10,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199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통일정책연구소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479-001-X

6,000원